

제429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17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4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4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4

(10시07분 개의)

○소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한병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소영·박형수 두 분 간사님을 포함한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국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에 모든 사업을 충실히 심사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회의인 만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소영 간사님을 시작으로 여야 위원님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소영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반갑습니다.

이소영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잘 가려내고 또 성장과 민생을 위한 예산들이 누락되지 않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꼼꼼하게 우리 소위 위원님들과 함

께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정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심사에 속도를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박형수 간사님.

○박형수 위원 박형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우리 정
부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잘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송기현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함께 논의하게 됐는데요. 내년 예산 전부 잘 편성이 돼서 우리 민생이
나아지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서로 기대하겠습니다. 그
걸 위해서 서로 같이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소외된 지역,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 최형두입니다.

같이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미래와 민생을 함께 준비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우리가 서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특히 AI 대전환기에 AI 예산, 모든 예
산에 AI 꼭지가 붙어 있는데 그렇게 다 쓸 수 있는 것인지도 꼼꼼히 심사하고, 특히 업
동설한이 곧 다가오는데 민생을 두텁게 보살펴 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개방경제기 때문에 대외여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환율
도 지금 급등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재정을 화수분처럼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확히 해서 미래와 민생을 함께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
니다. 저도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김한규입니다.

정권 첫해니까 야당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 모시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규 위원 강승규 위원입니다.

무늬와 내용이 다른 이런 예산들 좀,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행·집행 가능한 예산 등에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하고요. 지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방에 숨통이나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예산에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이재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통
해서 경제활력과 민생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훈 위원** 조정훈 위원입니다.

빛내서 하는 예산입니다. 국민들에게 빛을 낸 만큼 중요한 예산이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설득할 수 있을 그런 필요한 예산들만 꼭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국가의 미래와 민생 그리고 국민의, 우리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예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애 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예산심사입니다. 빛을 내서 예산을 짰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 빛이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마중물이 되고 새로운 시대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 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김기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예산안 심의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조계원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과 활력 그리고 민생의 회복을 위해서 여야가 힘을 모으는 예산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대식입니다.

내자가추(來者可追)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을 새기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것을 경계하고 예산을 잘 꼼꼼히 챙기는 데 여야 위원님들과 모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종면 위원** 노종면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심사 과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시한 지킬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과 잘 상의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박민규입니다.

새 정부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예산안인 만큼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위원 여섯 분 선배님들 잘 모시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은 우리 소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사 활동을 지원할 배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2차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결위가 시작된 지 한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요.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에서 풍부한 내용을 모범적인 일정으로 진행해 주신 데 대해서 행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내용적으로는 여건 변화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은 덜어내 주시고 그리고 정부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증액으로 또 이렇게 보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멋지게 예산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대한 정부가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우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국회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안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고 성심성의껏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10시15분)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BTL),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배부해 드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계획(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고, 2페이지 로마자 IV번 심사 대상과 심사 방식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구두질의 및 서면질의의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심사 방식입니다.

전체 심사 순서는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순으로 심사하되 예비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임위는 뒤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 합의로 순서 변경이 가능하고 소위 심사 전까지 미의결된 상임위에 대한 심사 여부 등은 위원장님, 여야 간사님 협의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심사, 증액심사, 부대의견 심사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액심사 관련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부처 의견 청취, 위원님 질의, 소위원회 결정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부처별로 세입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 보류로 결정된 사업은 추후 위원장님, 여야 간사님 협의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감액과 증액 의견을 함께 심사하고 세출예산안은 감액 의견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감액심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출예산안의 감액심사 대상은 모두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감액 의견만 있는 감액사업, 둘째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함께 제기된 감·증액사업의 경우 감액 의견 부분, 셋째 감액과 증액이 연계된 증감액 연계사업, 넷째 예산비목을 변경하는 등의 기타 특이사항입니다. 이 중 세 번째 증감액 연계사업의 경우 감액과 연계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맨 마지막 동그라미, 감액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부처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증액심사입니다.

증액심사의 방법 등은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 간 협의 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부대의견 심사입니다.

부대의견은 별도 협의체에서 심사한 후 간사님 확인을 거쳐 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적으로 각 교섭단체에서 한 분씩 선정하여 별도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상임위 동의에 관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부조직 개편 관련 심사 방식입니다.

26년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정부조직법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이 이미 시행된 부처는 제출된 예산안 기준이 아니라 업무 이관을 반영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 말씀드리면 에너지사무가 종전 산자부에서 신설된 기후부로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에너지사무 관련 예산안은 기후부 예산안 심사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이 내년에 시행 예정인 부처의 경우에는 제출된 예산안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하 별첨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으신 활동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경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경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상임위는 총 16개 상임위입니다. 이 중 오늘 현재까지 법사위, 정무위, 교육위, 국방위, 농해위, 복지위, 성평등가족위, 이상 7개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7개 상임위 심사 결과 총수입은 증액이 1463억 4800만 원, 감액은 200억 6000만 원이고 총지출은 증액이 8조 4711억 8900만 원, 감액은 8327억 7000만 원입니다.

아직 예비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임위는 9개 상임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페이지 이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선중규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1권 3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3페이지 1번, 공정거래조사지원운영입니다.

수정이유란을 봐 주십시오.

이 사업은 공정위 조사총괄담당관실 내 디지털포렌식 인원 증원(9인)에 따른 장비 확충, 출장여비 및 교육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기존 디지털포렌식센터운영(정보화) 사업과 중복되므로 동 사업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 사업예산 18억 7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면 4페이지 두 번째 칸에 앞서 말씀드린 예산이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 금액 간에 약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당초의 예산안은 19인에 대한 장비 예산이었는데 상임위에서 이 중 계장급 3인을 제외한 16인에 대한 장비 예산을 편성해서 1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증감액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정위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들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우리 기관은 증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기획재정부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대로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4페이지입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운영(정보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포렌식교육은 디지털포렌식 분야 내부 전문가 양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위

탁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021년부터 24년까지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자를 디지털포렌식 현업부서에 배치하지 않는 등 교육 후 인력배치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25년 교육 수요 미달로 위탁교육자가 선발되지 않고 있으므로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예산 1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도 수사 사건의 성과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감액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위원 감액 관련해서 논의했는데 정부 측 의견 따르겠습니다, 그냥.

○소위원장 한병도 정부 측 의견대로요?

○박민규 위원 예.

○소위원장 한병도 철회하는 걸로요?

○박민규 위원 예.

○소위원장 한병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회하는 걸로 하고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정부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원안 유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선진소비자정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에 3개의 내역사업이 있는데 모두 상임위 감액의견이 있는 사업이므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칸 내역사업인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감리용역 등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8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내역사업인 소비자정책 국제협력사업에 대해, 네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아시아소비자정책포럼 개최를 위해 편성된 4200만 원은 실제로는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참석에 집행할 예정이므로 이에 필요한 예산 700만 원만 반영하고 3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소비자정책 추진 및 추진실적평가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과다·중복 편성된 예산 2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말씀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기재부 의견 안 들으셔도……

○소위원장 한병도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증액 부분이 있을 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상임위 의견대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그러니까요. 상임위 안대로 감액하는 걸로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6페이지입니다.

4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사업입니다. 공정위 마지막 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거래종합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법 개정 여부와 시행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1년 치 운영 예산이 전액 편성되었으므로 관련 예산 6억 8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말씀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출범하려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련된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지가 1년이 넘는데 아직 법도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통과되고 준비기간을 다 고려해 볼 때 죽었다 깨도 1년 예산이 다 필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법안이 통과된 뒤에 예비비로 계상하든지 하는 게 맞지 법안 통과가 전제되지도,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을 전액 반영하는 것은 예산집행 면에서 불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말씀하십시오.

○박민규 위원 조정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매우, 현재 대한민국 공정거래 관련해서 수요자들의 만족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공정거래 법질서 확립의 필요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아까 조정훈 위원님 말씀처럼 국회의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한 가변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대 국회 2년 차에, 3년 차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감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 안은 이견이 있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 잠깐 텀 사이에 질문인데요.

정무위에 이 법안이 계류 중인 게 이게 처리될 가능성이 낮은가요?

○조정훈 위원 그거야 아무도 모르지요.

○강승규 위원 그것보다는 법안이 아직 형성도 안 됐는데 예산을 미리 반영하는 건……

○조정훈 위원 근거 법안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태워요.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안이 계류 중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무위원장님이 국민의힘 위원장님 아니세요?

○조정훈 위원 맞지요.

○임미애 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회의가 안 열리는 것 아닌가요?

○이소영 위원 아니, 그런데 참고로 사실 모든 예산이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법률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렇다는 얘기를 참고로 저도 남기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센터를 설립하는 데 법적 근거가 없어도 돼요?

○이소영 위원 예, 그렇지요.

○김한규 위원 왜냐하면 이건 조정을 하는 거니까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걸 전제로 결과를 내는 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소비자분쟁조정원하고 같은 거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회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입니다.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김기한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김기한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0페이지 금융위원회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증액이 1건 있습니다.

기타재산이자수입입니다.

이 세입 과목은 금융위가 각종 국고보조금 사업의 정산 처리 과정에서 이자수입 및 수익금 등을 반납받아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보조사업의 정산 처리 후 이자 및 수입금이 1억 원을 넘는 경우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2026년에도 25년과 유사한 수준의 기타재산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5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들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세입 증액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 증액 관련 기재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걱정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감액 사업 2건, 감·증액 사업 3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산업은행출자(지역활성화 투자펀드)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지자체 및 산업은행이 출자하여 민간투자 마중물을 위한 모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4년·25년 프로젝트 선정,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하고 이미 출자된 예산으로 26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5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고, 그 아래 두 번째 칸입니다. 유사한 사유로 7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상임위 500억 감액 의견에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상임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이소영 위원 이 부분은, 이게 지금 감액으로 인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연차별 사업에 영향이 없는지를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보류하고 추가로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실까요?

그러면 이 항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통상대응프로그램 지원(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입니다. 이 사업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신설되는 조선협력펀드 등에 대한 산업은행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세부 사업 내용이 미흡한 점을 감안해서 31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칸입니다. 대미 협상 결과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공사 및 기금 신설을 추진할 예정으로 기재부 일반회계에 해당 공사·기금 운영에 필요한 공사 출자금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대신 이 사업 예산 63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세 번째 칸입니다. 이 사업은 조선업에 한정된 것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고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정확한 용처 없이 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한

바, 63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전액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이게 증감 연계라서 기재부 의견을……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사안하고 관련해서는 전액 감액을 하셔도 국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액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송기현 위원 잠깐만요.

이게 다른 걸 설치해서 그리로 넘긴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소영 위원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예산을, 그렇지요?

그런데 그건 어디서, 기재위 할 때 논의가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 건하고 관련해서는 기재위 증액 심사하실 때 논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지금 보류를 해서 한꺼번에 같이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게 기재위 논의할 때 증액된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는데 보류를 해서 한꺼번에 논의하시지요.

○송기현 위원 그래서 보류를 해서, 확정하지 말고 기재위 할 때 이것을 같이 논의해서 가지고 거기서 규모든지 봐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한병도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보류를 하더라도 기재부가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페이지에 보면 금융위, 산업부, 기재부에 세 가지로 쪼개져 있었던 예산반영안이 다 없어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된다는 취지인 건데 이 계획에 대해서 기재부가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대미 관세협상 하던 초창기에는 규모와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결정이 안 돼서 대출과 보증 이런 게 진행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수은, 산은, 무보에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은 대미 관세협상이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대미투자기금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미투자기금에 정부가 필요한 재원만큼 출자하는 형식으로 일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산은, 수은, 무보하고 관련된 출자자금은 한 군데에 모아서 적정한 금액만큼 대미투자기금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냥 전액 삭감하는 게 나아요, 어떻게 지금처럼 보류를 했다가……

○임미애 위원 증액 논의에서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박민규 위원 지금 기재위 예결소위가 오늘 9시 반에 진행되고 10시에 의결이 될지

안 될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증감 연계로 보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정훈 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지 이게 지금……

○소위원장 한병도 지금부터 토론이 되면 발언권을 저한테 얻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저는 지금 한 가지만 궁금한 게,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고 기재부와 정부의 입장은 이걸 다 일단은 털어 내고 새로운 펀드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게 국회에 제출된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과정에서 증액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 사안이 오늘 지금 10시에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하면서 의결을 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정부안에다가 증액하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조정훈 위원 그리고 규모는 이 3개를 더한 순증 630, 570, 700 다 더한?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기재위 소위에서는 대미투자기금에 증액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조정훈 위원 규모는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 규모는 일단은 한 7000억 정도 해 놓고요. 최종……

○조정훈 위원 얼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일단 7000억 정도 해 놓고 최종적인 금액은 예결소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짚어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그러면 지금 산은, 수은, 무보 등에 당초 편성했던 1조 얼마 정도 되는 예산보다 더 규모가 크니까, 적습니까? 대미.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마 맥시мум이 1조 9000이 될 겁니다.

○강승규 위원 1조 9000?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맥시мум이.

○강승규 위원 그러면 더 커지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 현재 지금 반영돼 있는 금액이 1조 9000인데요. 1조 9000을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미투자기금 운용되는 상황을 예측해서 1조 9000보다 줄어들 수도 있고, 맥시мум이 1조 90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 항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이걸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소위원장 한병도 잠시만요.

박형수 간사님.

○박형수 위원 좀 전에, 앞엿것인데요. 산업은행 출자 관련해 가지고 이소영 간사님이 보류하자 그랬잖아요. 이게 감액을 다시 복원하자는 취지인가요? 그러면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소영 위원 보류하는 것까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요.

○박형수 위원 그러니까 보류해서 취지가 상임위가 감액한 거를 다시 복원시키자라는 취지이면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걸 그냥 다른 방식으로 다른 논의를 하자라는 거면 동의를 안 받아 와도 되고 어떤 취지……

○이소영 위원 감액과 더 추가적인 감액까지 의견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유형의 출자펀드가 상호 연계성도 있기 때문에 다른 펀드하고 같이 출자를 하는 경우라거나 또 민간자금하고의 어떤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최종 결정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이고요. 보류하는 것까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박형수 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닌데 그러면 보류를 해 놓고 만약에 감액을 복원하는 취지라면 그때 동의를 받아 오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지요.

○이소영 위원 예.

○소위원장 한병도 그건 당연한 절차 같은데요.

이것도 보류하고 이 항도 보류, 다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3페이지 3번,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유스(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의 세 번째 줄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출연금 바탕의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의 정부재정 투입분 중 복권기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재원으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복권기금의 정책금융상품 관련 출연금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금융권의 사회적 공헌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고 정부재정이 전액 보증하는 특례보증 규모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업 예산 10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아래 두 번째 칸에 햇살론 금리 인하를 위해 106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정부 의견을 먼저 들으시는 게……

○소위원장 한병도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정부 측은 증액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지금 삭감 먼저 하는 것 아니에요? 증액은 지금 얘기하는 게……

○박형수 위원 증액은 얘기하는 게 아니지, 지금.

○김대식 위원 지금은 감액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승규 위원 예, 감액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햇살론 서민금융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부재정이 이렇게 전액 보증특례 이런 쪽에 자꾸 확산되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박민규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송기현 위원님.

○박민규 위원 정부 측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강승규 위원님 말씀처럼 재정에 부담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게 갖고 있는 취지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정부 측에서 이 재정부담을 좀 완화시킬 만한 계획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우선 이 서민금융 금리가 15.9%로 매우 높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금리를 좀 낮추기 위한 추가 재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민간에서 출연금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서 재정과 민간이 균형되게 서민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저도 같은 취지인데요. 일단 서민금융이 현행 15.9%가 저소득·저신용층에게는 너무 높은 부담이다, 이 부분 완화하자는 것은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이 가고요. 이런 면을 감안해서 감액은 좀 적절치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송기현 위원님, 같은 내용이신가요?

○송기현 위원 아니요, 물어보려고요.

이게 재정이 들어간다고 해도 마찬가지로요. 금융권 등 민간에서 들어가는 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액수가.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금융권의 사회적 공헌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융권의 사회적 공헌 그것은 약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도 계속 비슷하게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기현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금융권의 경우에도 사회적 공헌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비율도 금융권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같은 내용이면 좀…… 똑같은 내용이신가요?

○강승규 위원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감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안대로 동의를 해 주시겠다는 것? 예상 외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이 건은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4번 국민성장펀드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여 5년간 75조 원을 투입하고 민간재원 75조 원을 조달하여 총 150조 원 규모의 메가펀드인 국민성장펀드를 운용하려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투자하는 비회수형 정책펀드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 운용방법 등이 모호하여 수익·책임·투명성이 불확실하므로 1조 원 예

산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과 5000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김대식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이것 150조 원 이것은 한 네 가지로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채무 증가를 전제로 한 관제 펀드는 매우 위험한 구조다. 공공기금 75조가 초과세수나 국부기관이 아닌 정부보증채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국민 부담 확대로 이걸 조성한다는 점을 제가 문제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장 선택을 대신한 정부 선택 구조, 관치 금융의 우려가 강하게 제기된다. 세 번째, 민간자금 75조 원의 매칭은 정말 실현성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번째는 수익, 책임, 투명성이 모두 부재한, 어떻게 보면 캄캄이 펀드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민성장펀드 전체 사업은 투자 대상, 운용 방식, 수익률, 회수 전략 등 모든 핵심 정보가 부재한 상태이므로 2026년도 예산 1조 원 전액 반드시 감액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여기에 지금 150조의 국민성장펀드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데 민간부문에서 75조 원을 조달한다, 어디에서 이렇게 조달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크게 보면 은행, 증권, 보험 쪽에서 수익성에 기초해서 참여를 할 텐데요. 현재 금융권들이 스스로 발표한 규모만 보더라도 75조 원 규모를 일단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5년간 투자를 할 것이고요. 큰 프로젝트에 어차피 은행들이, 보험이 투자해야 될 부분을 정부하고 매칭을 해서 이렇게 유지를, 운용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은행, 증권, 보험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데가, 국민성장펀드 성격이 앞으로 어떻게 그림 그려질지 모르는데 75조 원씩이나 투자할 수 있다는 막연한 그림이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이것 혹시 연기금 같은 데서 끌어 쓰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증권시장에 연기금 넣는 것 보니까 여기에 또 연기금 넣으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연기금은 여기 배제됩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당연히 장기 자산 운용하는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승규 위원 아니, 자발적이 아니라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펀드나 어떤 투자 하려는데 정부 재정하고 연기금 같은 것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관치라고 제가 표현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재정건전성을 계속 해칠 것이다, 결국 연기금의 건전운용을 또 훼손할 것이다 그런 우려가 든다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한말씀만 올리면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기초하되 큰 프로젝트 중심으로 철저하게 수익성에 기초할 것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하도록 할 것이며, 저희가 기금을 이렇게 모아 놓는 것이 아니고 캐피털 콜 방식으로 괜찮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민간이 스스로 여기에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운용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박민규 위원님.

○**박민규 위원** 본 위원은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100조였다가 150조로 늘어서 기존 계획대로 하면 1조가 아닌 1조 5000억이 증액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다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관치 금융에 대한 우려라든지 수익성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금융위원회하고 펀드 자체에서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전체 150조 중에서 국가재정이 차지하는 것은 1조인 거고 이것은 마중물이나 기본적인 보탬을 위한 거고 재정 규모 대비 효과성은 매우 증대하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원안 유지이고 또 노중면 위원님은, 5000억 증액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정훈 위원** (손을 들)

○**소위원장 한병도** 잠시만요, 임미애 위원님 먼저 하고 그다음에 조정훈 위원님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해외의 국가성장혁신 투자펀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면 우려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기업의 목 조르기 아니냐 그리고 연기금을 투입해서 건전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우려점들을 최소화하고 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해외 여타 나라들은 이미 이런 국가성장혁신 투자펀드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원안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조정훈 위원님……

아니요, 잠시만요. 조정훈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조정훈 위원**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1조가 정부가 들어가면 민간이 5년간 75조 정도 들어오는 것을 올해 예상하시고, 그다음에 투자 분야가 AI·반도체·바이오 등 지금 분야가 결정돼 있고 산업별로 저희가 보니까 AI에 30조, 반도체 20조, 모빌리티 사업에 15조 등 정책 목표에 따라 금융을 지금 나누겠다는 뜻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 펀드의 목표수익률이 몇 퍼센트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장기 5년을 투자해서 20년을 운용할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수익률을 이렇게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사업이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와……

○**조정훈 위원** 이자비용은 몇 퍼센트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이자비용은 현재 75조로 보면 국공채 수준의 조달……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계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자비용을?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한 2%대……

○조정훈 위원 얼마냐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2%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비용이 얼마냐고요, 이자비용이, 우리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칠십……

○조정훈 위원 이 사업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관계없이 일단 매몰비용으로 바뀌 가야 되는 이자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조정훈 위원 이것 국고채에서 조달하는 것 맞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얼마냐고요, 이자비용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75조, 그것 제가 보기에 한 2.5%에서 3% 정도 수준으로 해서……

○조정훈 위원 얼마냐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규모를……

○조정훈 위원 자, 보세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조정훈 위원 빛내고 우리가 얼마 갚아야 되는지 생각이 없으세요. 이 숫자 하나 갖고 오지 않고 예결위에 올라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돈 아니니까.

두 번째, 엑시트 플랜(exit plan) 있습니까, 이것?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운용……

○조정훈 위원 이게 만약에 수익률이, 예상도 지금, 목표수익률도 없지요? 그러면 이 펀드의 성공 여부는 뭘로 판단하십니까? 펀드라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운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투자에서 그 금융비용 다 제끼고 이익이, 수익이 남아야 펀드가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목표수익률도 없고 이자비용도 얼마인지도 계산도 지금 못 하시고 이제야 계산기 두드리고 앉으셨고.

저는요, 우리 국가가 만들어 낸 펀드의 흑역사들이 너무 많아요. 여야 솔직히 진보·보수 합해서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뉴딜펀드 수익률 부실 났지요. 박근혜정부에서는 통일대박펀드 해서 이것도 말아먹었습니다, 솔직히. 이명박 정부에는 유전펀드 해서 실패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선박펀드 했다가 상장폐지되고 수백억대 손실 남기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정권의 정말 가장 상징적인 펀드를 운용해서 대박이 난 경우는 아직 없어요.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거의 전액을 부채를 유발해서 지금 이자비용은 확실하게 나온 건데,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아마 부채로 하더라도 투자해서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면 국가에게 좋은 것 아니나라면서 케인즈 이론으로 가시는 건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조정훈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목표수익률이 몇 퍼센트냐고요? 이자 비용 이상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몇 퍼센트냐고요, 목표수익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지금 20년 정도를 운용하기 때문에 최종 수익률을 제가, 정부 입장에서 얼마나…… 내부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겠지만 철저하게 이것은 수익성에 기초해서 운용할 생각인데 그 수치로 저희가 이야기……

○조정훈 위원 그 수익성이 국채 이자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게 높게 운용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투자처를 발굴 못 하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충분한 투자 수요처는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를 들면 AI나 반도체나 데이터센터……

○조정훈 위원 투자처가 있으세요, 지금 명단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지금 굉장히 많이……

○조정훈 위원 저희한테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저희가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데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이것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리고 지금 민간이 75조가 들어오지요? 그러면 민간하고 공공기금하고 섞으실 거예요, 아니면 층을 나누실 예정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정부가 후순위나 중순위로 받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동 순위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 민간은 순위가 선순위 쪽으로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민간투자는 보장해 준다는 거고, 리스크는 보장해 주는 거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 세금 내서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펀드는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가장 많이 부담하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만약에 수익이 나도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청산할 때 그 수입은 다 국고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청산할 때, 10년 뒤에? 그 전까지나……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20년……

○조정훈 위원 20년 뒤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성공하고 하면 세금도 나고 일자리도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넓은 의미에서 어떤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사업으로……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 펀드로 성장을 견인한다 하셨는데 GDP 성장에 영점몇 퍼센트 기여합니까, 이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부가가치…… 저희가 통계는 한번 계산을 했는데요.

○조정훈 위원 얼마입니까, 그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제가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조정훈 위원님 좀 추가로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해서……

○조정훈 위원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준비가 안 되고 적절하지 않은 펀드라고 생각해요.

○소위원장 한병도 혹시 필요하면 또……

○조정훈 위원 과거 정부에서 다 실패한 걸 또 하겠다는 겁니다. 저 이견 반대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노종면 위원님 먼저.

○노종면 위원 제가 질의를 한 당사자이기도 해서요. 지금 야당의 우려를 들어 보면 공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펀드 조성의 필요성 그리고 또 목표에 따른 실행 계획이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국회에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국회에서도 서면 그래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대로 펀드 조성 목표 규모가 100조에서 150조로 늘어난다면…… 오늘 이 부분은 보류가 돼서 심도 있는 추가 논의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늘어나면 정부 내년도 예산은 최소 5000억은 늘어야 됩니다. 이게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정부가 마중물 개념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목표가 100조일 때 가졌던 예산 규모를 가지고 150조를 하는데 그 반은 민간이 들어오게 한다 이런 어떤 정부의 책임성을 투자하는 민간에 어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정교하게 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예산이 확대된다면, 규모 목표치가 확대가 된다면 그에 맞게 정부가 투자하는 금액도 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지금이 국가적으로 첨단전략산업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조계원 위원 이 시기에 투자하지 않고 대안이 있습니까? 김대중 정부 시기에도 IT 분야 처음에 벤처나 이런 투자 부분에 했을 때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때 적기에 투자가 이루어졌고 지금의 IT 강국으로 도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AI 시대에 단 하루만 뒤쳐져도 수십 년이 뒤쳐질 수 있다는 지금 그 시기에, 더구나 민간에서 75조 정도는 지금 바로 가능하다고 확보돼 있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 정도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오히려 1조 원 정도의 마중물은 부족

하지 않나,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 증액심사는 아니니까 저는 원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이 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첨예하게 갈려서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5페이지 청년미래적금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서금원에 정부기여금 및 시스템 구축·유지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낮은 청년 고용률을 감안하고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청년 취업이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업 예산의 50%인 3723억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청년미래적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자산을 형성해서 그 자산을 기반으로 삶의 안정성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을 봤을 때 지원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예산 규모가 어떻게 나왔는지 봤을 때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들의 75%가 가입할 것으로 전제를 해서 483명을 산출했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당초 안이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근로소득 있는 청년들의 75%면요 투표해 보면 알겠지만 75%면 다 한다는 소리거든요. 이것 진짜 다 할 것 같으세요? 이것 예산 남지 않을까요? 우리 빚내서 하는 예산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 일단 반 정도 해 보고 소진이 되면 내년에 추정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짐작하는데 그때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이 청년, 근로소득 청년 전원이 거기에 가입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강제성도 없는 건데?

강제성 없는 거지요, 이것?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의욕적으로 충분히 재정을 배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 가입률 75%가 목표가 크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무위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가입률을, 낮추는 가입률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상품의 설계가 청년들이 희망하면서 청년들이 동의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잘 받아서 그렇게 맞춤형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저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간사님들이 현실적인 가입률을 전제로 재계산해서 그 부분만큼은 감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잠시만요.

이소영 위원님 그다음에 임미애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박민규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일단 오늘은 제가 말씀을 최대한 많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너무 많이 듣는 것 아니에요? 두 사람…… 그렇게 해 갖고 언제 다 끝나요?

○소위원장 한병도 오전까지, 오전은 제가 아무튼 위원님…… 이후에 오후에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쟁점이 명확하고 반복된 토론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충분히 더 그렇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소영 간사님.

○이소영 위원 일단 질문이 몇 가지 있어서요.

청년미래적금 기여금 지원이 7395억 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게 5개월 치거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가입을 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이것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3년간 지원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5개월 치가 7395억 원이라고 하면 1년으로 환산하면 얼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한 1조가 좀 넘을 것으로……

○이소영 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한 1조 5000억 정도 예상합니다.

○이소영 위원 1조랑 1조 5000억 원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미래적금, 이전의 정부마다 유사한 사업이 있었는데요. 청년도약계좌,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에서 운영했던 거. 청년도약계좌는 1년에 어느 정도 재정 소요가 있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맞으면 한 3700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연간 유사한 목적과 취지의 사업에서 3700억 정도 재정 투입을 하던 건데 1조 5000억 원이 되는 거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기여율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이게 재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만큼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예산을 배정해 주면 설계를 잘해 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배정 단계에서 사실 구체적인 설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되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아까 계속 정무위에서 어떻게 논의됐다, 기존 안이 그렇다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 소위 자료에는 정무위에서 논의하셨다고 하는 어떤 변경된 내용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일단 부대의견이나 이런 쪽에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요. 정무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원안을 유지하되 청년 중에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6개월만 다닌 분까지만 주는 것을 전체 중소기업 재직자로 확대를 하려면 10만 명에서 약 141만 명까지 늘는 안을 고려해라 하는 것이 있었고요, 여야 합의로.

두 번째는 정부 지원율이 일반형은 6%를 저희가 매칭해 주는데 그 일반형의 기여율을 조금 더 높여서, 8%까지 높여서 조금 더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되 현 예산 수준에서 그것을 좀 조정을 해라라는 의견에 따라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추계율을, 75%가 목표치가 높다는 그런 측면의 추계율을 좀 더 떨어뜨리면 이 예산 내에서 이런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정무위에 설명을 드렸고 정무위에서는 부대의견은 안 달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만 오늘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하다면 여야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일반형의 경우에 기여율을 원안 초안에서 6%였던 것을 지금 8%로 올리신다는 거고, 중소기업 청년들하고 아주 저소득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청년들한테 제공되는 우대형의 경우에는 12%를 유지한다는 건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기존의 지금 일반형의 경우에는 연 6000만 원 소득까지가 상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청년들하고 중소기업 청년의 재정 지원 비율이 격차가 더 좁아지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지금보다 더 늘려서 일반형과 우대형의 격차를 더 키워야 되는 게 아닌지 하는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재부에 드리는 질문인데 이게 지금 3년 만기를 채워야지만 그 돈이 지원이 되는 거고 중도에 해지를 하면 3만 원씩 붙였던 것을 회수, 환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나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이소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청년이 50만 원을 내는데 일반형의 경우에 3만 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6만 원 이렇게 해서 첫해에 정부 재원을 지출해서 붙였는데 두 번째 해에 그걸 해지한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환수된 거는 세입으로 잡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래서 정부 자금을 나중에 안 주게 되면 청년들한테 혜택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민간에 맡겨 가지고 기존 통상적인 이자율 받는 만큼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설명에 의하면 이게 재정이 한 번 나갔다가 일부는 환수되는 방식인 건데, 어차피 청년의 입장에서는 그 3년 만기를 채워야지 재정과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지원 사업의 경우에 이걸 받는 시점에 후불로 재정에 반영할 수 없는 건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거하고 관련해서는요 지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일시에, 3년 뒤에 재정 소요가 집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발생주의 개념으로 이 정도는 그 해에 생길 것 같다는 거는, 미리 적립해

두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이 이걸 가입했다가 어려운 경우에 중도 해지를 하거나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웬만하면 결혼이나 이런 특별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그대로 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중간에 이 청년이 이 돈을 해지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여금을 못 받기 때문에 중도 인출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금액은 자금이 필요하면 인출했다가 다음에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미리 편성이 돼 있어야지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설계했던 모든 상품들도 미리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저는……

○**소위원장 한병도** 됐나요?

○**임미애 위원** 답변 중에 해결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부위원장님, 지난번 앞에서도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이게 원래 225만 명에서 287만 명 정도로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런데 483만 명으로 경충 뛰는데 이게 너무 과다 계상을 한 것은 아닌지 그다음에 이게 원래 정책 목표의 목적을 굉장히 훼손할 우려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고용률 하락이라든지 장기실업 증가 상황에서 근로소득 청년만 지원하는 구조가 청년 내부의 형평성을 좀 해칠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과다 계상한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래서 이번에는, 소득이라는 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로소득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사업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전환해서 저희가 지원을, 소득이 있는 청년은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거는 지금 이번에는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 또는 소상공인들까지 확대를, 늘렸기 때문에 그동안 좀 혜택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 혜택을 줄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보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설계보다 추계율이 좀 높은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동의하고 계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여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동의를 하셨으니까, 7395억 원을 과잉 편성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시니까 3723억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추계율이 좀 높지만 청년들이 더 희망하는 쪽에……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6개월이 아니고,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중소기업에 6개월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계속 근무한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형평성 때문에 중소기업 재직자 전체로 늘리니까 10만 명이 141만 명까지, 약 131만 명이 혜택을 받는 그 금액만큼을 또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안은 그대로 해 주시면 해

택을 좀 늘리는……

○**김대식 위원** 그래도 저는 483만 명은 과다 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래서 저희가 추계율은 위원님 말씀대로 떨어뜨려서 하 되 맞춤형으로 도움되는 쪽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말씀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야당에서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하나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 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추계라든가 그다음에 상품의 설계 내용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감액 의견이 제시됐을 때의 상황은 설계안이 지금 설명하신 거랑은 상당히 다를 때였어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상품일 때 과연 여기 가입하려는 청년들이 정부가 예상하는 만큼 되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던 건데 지금 매우 중요한 부분에서 설계 내용이 바뀐 거네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자율 매력도도 높아진 거고요. 그다음에 가입할 수 있는 기본 자격 이것도 취업 후 6개월에서 기존 재직자까지 확대해서 확 늘어난 거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매력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3년짜리 상품인데 근속을 3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걸 뭐라고 할까요, 요건의 여탈권을 기업이 갖고 있는 거예요. 2년 재직을 시키면 정규직으로 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2년 코앞에서 다 계약 갱신을 못 합니다. 그런 상황을 반영을 해야만 이 상품이 진짜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상품 설계 과정에서 반영을 해서 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예산이 부족할지도 모를 만큼 매력적인 상품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청년미래적금 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 토론이 많으면 여야 똑같은 비율은 아니더라도 비슷한게 내용이 반복되면 한 두세 분 이렇게 압축이 되고 또 이견이 반복된 질문 같은 경우는 한 분씩 토론 듣고 저희들이 그냥 결론을 내고 이렇게 조금씩 속도를 서서히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신용보증기금 수입 감·증액사업 2건 있습니다.

기타유가증권매각대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를 봐 주십시오.

25년 4월 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관련 수입 항목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입 항목인 기타유가증권매각대에 7500억 원, 그리고 다음 24페이지를 보시

면 기타재산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79억 7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각각 있었고.

수입 항목에 따라 대응해서 지출 항목을 또 늘려야 되는데요. 그것은 26페이지에 있습니다. 26페이지에 지출 항목에도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사업을 신설해서 7580억 1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업은 기금 내의 증감액이 연계 사업이므로 금융위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정부 측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증감 연계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특별히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한병도 예.

○조정훈 위원 죄송합니다.

앞의 7500억은 알겠고 그다음 페이지 79억 7400만 원은 이게 업무수행 비용입니까? 7500억은 공급액이고.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이자비용……

○조정훈 위원 유동화증권 발행을 이만큼 하겠다는 거잖아요, 7500억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다음 24페이지의 79억 원, 읽어 보면 신용보증기금이 적절하게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79억 원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비용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닙니다. 이자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이자비용?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이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아, 수입?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조정훈 위원 착각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지출입니다.

감액사업 2건과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업무용건물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신용보증기금 대구지점 건물 대수선 공사를 위해 4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 공사비 30억 원은 26년 내에 집행 가능성이 없고 다음 연도 이월도 불가능하여 불용이 예상되므로 3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정부 측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30억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2번 위기대응특례보증대위변제, 신규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5년도에 위기대응특례보증 프로그램에서 당초 3조 원을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대위변제액을 산출해서 편성했는데 실제 25년 예상 공급 규모가 1.5조 원 규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5년 예상 공급규모 1.5조 원을 기준으로 재산출한 결과에 따라 계획액 대비 7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입입니다.

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전입금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농신보 운용배수가 지속적으로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26년도에는 기타특별회계전입금이 전액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신보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므로 기타특별회계전입금 1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증액사업……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 증액사업인데 지금 왜 하는 거지요?

(「수입 사업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아, 수입……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것은 수입이 어디 민간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농특회계 세출을 늘려 줘야 이쪽에 수입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할 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증액할 때 재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났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마지막 1건이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수입 역시 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재고자산매각대입입니다.

이 세입과목은 예보채상환기금이 보유한 출자금융기관 주식을 매각할 때 따르는 수입입니다. 현재 예보채상환기금이 서울보증보험의 주식 83.85%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내년 26년에 33.85%를 매각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예상 매각대금 1조 3042억 29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줄입니다. 이에 대해 27년 말 예보채상환기금 청산 시까지 경영권 지분 매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부 매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매각을 전제로 1조 9264억 8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도 같이 증액 때……

○김대식 위원 이것도 같이 증액 때 이야기하는 게 안 나아요?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다른 건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이 사항은요 정부 내부 세출하고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먼저 금융위 의견을……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저희는 현실적으로 26년도에 모두 매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매각이 어려우니까 원안 유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소위원장 한병도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박민규 위원님.

○박민규 위원 관련해서 이게 금융위 입장이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증액…… 세입, 수입 증액이지요, 이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박민규 위원 이게 세출 증액이 아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더 금융위가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증액 의견을 낸 겁니다. 그래서 보류 의견 내셔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금융위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끝났나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융위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속도를 조금 내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그럴까요? 이제 속도 좀 내겠습니다. 좋아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계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농식품부차관 강형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박순연 농식품부 기조실장 박순연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 오세요.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33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먼저 1번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국가농업AX 플랫폼,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총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온실·축사 스마트팜 등 선도 SPC를 추가로 기획·출자하려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줄입니다. 이에 대해 스마트와 AI 예산이 산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민간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705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3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본 사업은 소규모 ICT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달리 규모화, 집단화를 통해서 AX 전환을 촉진하는 새로운 모델의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차관님, AX가 뭘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AI 트랜스포메이션(AI Transformation), AI 전환……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아는데. 그래서 국가 농업에 AI를 적용하겠다는 이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우리나라 농업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그런 비슷한 사업들을 보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일일이 여기 나열하기도 어려워요. 스마트APC 전환 240억 원,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계획 1억, 스마트농업 첨단산업밸리 2억 원, 스마트 과수원 102억, 스마트팜 258억, 축사시설 스마트화 1400억, AX 기반 지능형 농작업 협업 산업화 기술개발—읽기도 어렵네요—70억,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178억, 열댓 개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너무 분절화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펀드로 만들고 민간하고 또 펀드를 해 가지고 민간출자 1500, 정부출자 1400. 저는 어떻게 보면 펀드 만능주의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저는 여기 요구한 대로 700억 원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조정훈 위원님이 쪽 읽어 주신, 그러니까 분절화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은 농업 분야의 경우는 효율성만 가지고 따지기 어려운 점이 좀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국내 시장 자체가 농업에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농업의 어떤 기술 발전도 국내 농업 시장만 바라본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할 가치가 없는 시장 규모인 게 우리 국내 농업 시장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에는 농업의 현실이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 적용이 굉장히 더딘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마중물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해서 전문성 있는 민간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여기서 어떤 모델들이 만들어지면 해외 시장들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으로, 그것보다는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나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 과기부에서도 AX라고 전체 부처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자랑하는 AI 10조라고 하지만 사실은 과기부가 GPU 사고 중요한 AI 핵심 인프라 구축하는 건 5조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4조가 전부 정부에 이렇게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과 효율을 따져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실제로 한번 걸러야 되고 또 과기부에서 봐야 됩니다.

AI 시대라고 그러니까 모든 부처가 AI랑 관계도 없는 것, 이게 왜 AI입니까? 이게 클라우드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게 GPU 어떤 소요에 관계됩니까? 그리고 이것 끝나면 어떻게…… 없어요. 그냥 AI 붙여 놓으면 예산을 부처별로 몇천억씩 딱 이렇게 나누어 갖는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건 예산 낭비고 정말 필요한 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수출산업 지원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지금 AX 사업으로 구분된 전 부처 사업을 철저하게 가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AX, AI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배치한 9조 몇천억도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따지고 보면 5조 정도만 과기부가 실제로 쓰는 거고. AI 3대 요소가 뭐니까?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 인재입니다. 그런데 그거랑 별로 무관한 부처별 위시리스트를 몽땅 AX라는 것에 올려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것은 그래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한번 사전에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AX라는 사업을 정부가 부각시키면서 너무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사업까지 있기 때문에……

물론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 진흥이라는 측면 중요한데 다른 항목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소위원장 한병도 1항은 보류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보류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임미애 위원 그래도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임미애 위원 지금의 농촌 현실을 바라보고 이 예산을 얘기하면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쓸모가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역발상이 필요한 것이 지금 농촌의 현실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율주행이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곳은 도시가 아니라 농촌 지역입니다. 왜? 농촌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히려 획기적인 기술들이 도입되어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농촌 현실, 고령화되어 있고 인구는 소멸되어 가고 있고 소득은 낮고 이런 상황에 AI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효율성이 매우 떨어져 보이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국가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아주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부대의견을 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런 AI라면 해도 되는데 그런 AI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이.

○소위원장 한병도 1항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3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세입입니다.

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기타재산이자수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보통예금에 단순 예치하고 있는 미집행 수탁자금이 약 2조 원입니다. 이것을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변경하여 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기타재산이자수입에 반영하여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우리 기관은 증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 사항을 수용해서 개선 방안을 재정 당국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 관련된 건 기재부 의견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아닌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임미애 위원 이것은 저는 농어촌공사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공사가 사실 이렇게 미집행 금액이 많은 이유는 공사를 하는 데 시기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농번기에 할 수 없고 농한기에 공사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주로 연말·연초에 공사가 몰려 있는데 이런 데 이 돈을…… 이자가 너무 낮지 않나요? 보통예금 이자율 0.1%에다가 이 돈을,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어넣고 운용하지 못한다는 건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농어촌공사뿐만이 아니라 저는 다른 부처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 묶어서 이건 부대의견에 달고 위원님들께서 증액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저도 하나……

○소위원장 한병도 예.

○김한규 위원 저도 예결위 질의 때 기재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연기금 79개하고 지방공기업 그다음에 지자체들이 연기금 풀에서 묶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5%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공기업이나 연기금들이 일단 자기네가 받으면 뭔가 국가에 다시 맡기는 것 자체가 싫어서 자기네가 관리하다 보니까 그냥 보통예금 이자율로 관리하는 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만이 아니라 임미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연기금 풀 기존 제도가 있습니다. 지자체는 약간 혼령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연기금과 공공기관은 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라서 정부가 이렇게 보통예금으로 수익성을 잘 못 내는 데는 개별 지적을 해 갖고 운용 못하면 연기금 풀에다 넣도록 좀 행정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요 건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부대의견 논의를 할 때 그때 다시 하는 걸로 하고 보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논의할 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세출 감·증액사업 2건입니다.

먼저 1번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 등 10개 부처에 대한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를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이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되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고 이미 수많은 AI 도입 및 연구개발 예산이 신규 반영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중복성과 예산 낭비 소지가 있으므로 675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2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유는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를 거쳤고 지금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예산집행 시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아까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 분야는 요소 기술은 개발이 많이 돼 있지만 시장성이 적어서 상용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시면 상용화돼서 AX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농림축산 관련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질문하게 돼서 좀 그렇고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AI 응용제품이 전 부처에 쏠려져 있네요, 산업부부터 한 10개 부처에. 그렇지요,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기재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조정훈 위원 합해서 한 1조 1500억 원 그중의 90%인 9000억을 국비로 하겠다는 거고, 사업 내용은 이게 R&D 사업이 아니지요, 큰 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닙니다.

○조정훈 위원 응용사업이지요? 이미 있는 기술을 상용화하겠다고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방금 말한 게 제가 좀 마음에 걸려요. 차관님이 농업시장은 시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드리면 상용화해서 시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제 말씀은…… 양해해 주시면 지금 시장이 작다 보니까 기업들이 개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주면 개발에 드는 돈을 세이브,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는데 시장이 작아서 안 팔릴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안 팔리지만 지금은 아예 개발 자체가 안 되고요.

○조정훈 위원 아니, 만들었는데도 안 팔리는 물건을 뭣 하러 개발하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래서 안 만든다는 거고요. 만약에 정부가 지원해 주면 상용화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아마……

○조정훈 위원 그거랑요. 또 하나는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는데 저희 당에서 분석하기에는 이것은 법률 위반 사항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국가재정법 31조, 이것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5월 31일까지 요구해야 되는데 요구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500억 이상의 경우 예타를 해야 되는데 예타를 안 해서 면제 조치조항을 지금 적용받았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법에 의하면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그 날짜를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9월 24일, 한참 지나서 착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다 여러 가지 다단계로 지금 국가재정법의 위반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법률 위반으로 예산에 담아도 됩니까,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 위반 문제하고 관련해서는요 국가재정법에 예타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타를 면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국무회의 의결 절차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예타 면제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라는 거는 예타 면제가 된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 규모가 혹시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느냐, 혹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없느냐 이런 내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법령 위반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처음에 질문 주셨던 것 중에 이 사업이 뭔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이 사업을 느닷없이 실행해 가지고 현장에서 사업이 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타입 1이 있고 타입 2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시장화가 가능한 거 그리고 2년 안에 시장화가 가능한 거 이런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요. 생짜 없

는 R&D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을 분석을 할 때 연구개발 정도부터 시작해서 시장으로 출시되기까지 9단계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1단계 R&D를 한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 5단계까지 진행이 된 것들 위주로 사업을 할 겁니다.

○조정훈 위원 차관님, 저는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타도 안 해 가지고 면제하는 상황에서 그런 구체적인 수요가 있으시다고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예타 했지요. 예타 해서 뚫었지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은 말로 해서 국가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하신 거지요.

저는 결론만 간단히 얘기하면 농림부를 포함한 각 부처에 있는 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이거는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차관님이 너무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제품 상용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조계원 위원 제품 상용화고 이게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농업 생산, 유통, 가공 등 농식품 기업의 AI 응용제품 상용화 수요가 362개 기업 중 89%가 참여를 희망하는 걸로 조사·분석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면제 절차 확실하게 거쳤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분명히 그런 것들은 얘기를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60개사가 참여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제품 상용화와 기존의 R&D하고는 명확하게 차별화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건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한병도 이 항에 대해서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말씀 듣고……

○임미애 위원 이 예산은 보류하지 말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농업인 안전과 관련해서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에 297명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분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때로는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여러 기술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안전장비뿐만이 아니라 농약을 방지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여러 가지 장비들이나 기술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진흥청에 가서 보면 이런 기술들이 왜 상용화되지 않았을까, 왜 이런 제품들이 농민들한테 보급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기업

들이 그것을 할 동력을, 요인들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용화하는 겁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R&D 사업이 아니라 그래도 기존에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것들을 상용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농촌 현장의 어려움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들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향후 토론을 하고 또 이게 10개 부처에 같이 사업이 걸쳐 있기 때문에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야 이견이 있으므로 다음 논의를 할 때 임미애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41페이지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투자조합을 조성·운영하는 모태펀드에 출자하려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투자가 사실상 종료된 20년·21년 결성펀드의 미투자액이 상당하고 19년부터는 회수액이 예산액을 초과하고 있어 정부출자액을 400억 원 유지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3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말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정부안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유는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0년·21년 미투자액은 이미 다른 펀드를 조성하는 데 썼고요 내년에 회수금액이 300억입니다. 그래서 정부출자 700억 합치면 내년에 2000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2000억 이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00억 감액하게 되면 600억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매년 펀드를 만들어서 전액 다 쓰지 못하고 미투자액이 나오고 있고 특히 마지막 해인 22년에는 저희 자료에 의하면 2500억 조성해서 1100억 투자해서 투자율이 50%가 안 되는 44%예요. 이런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데 계속 증액을 해 달라는 건 정부가 시장논리를 완전히 무시하든지 돈이 남아돈다고 생각하든지 두 개박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효용화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위의 거, 응용제품 신속 지원사업 이거 R&D 아니라고 해서 기술이 있는 거 상용화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다음 사업인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에도 비슷한 데 또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중복에 중복에 중복이에요. 농식품 모태펀드, 농업 중에 식품산업에 국한된다는 전제는 있지만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지금 이 모태펀드 출자하는 데 최신

기술 탑재하지 않은 상품이 있을까요? 누적된 펀드만 계속 만들어 대니까…… 저는 진짜 이번 정부가 두 가지 같아요. AI에 정말 너무 꽂혀 있다, 무슨 펀드 예산이다. 이걸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펀드를 감액하더라도 투자처가 있는데 못 쓴다 이건 전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기존의 퍼포먼스를 봤을 때. 26년만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하겠다라는 주장이 근거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감액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여기에 있는 미투자액이라고 하는 게 자펀드 결성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자펀드 결성은 됐는데 그 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벤처캐피털이 이 카테고리에 맞는 적절한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거나 또는 물색 후에 협의하고 있거나 이런 유보금액인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투자 후 4년간은 투자의무비율이 있습니다. 그 의무비율을 못 채운 거지 투자가 안 된 게 아니라 이건 앞으로 투자가 될 금액들입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모태펀드라고 하는 구조 자체를 저희가 전제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모태펀드 여기 있는 이 300억 원의 돈이라고 하는 거는 자펀드를 결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출자자로서 일부를 공여하는 거고 민간에서의 자금이 50% 매칭되기도 하고 60% 매칭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펀드가 결성되고, 자펀드는 자기의 계정에 이 두 가지 종류의 출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 놓고 있다가 좋은 투자 대상이 나타나면 바로 그중의 대부분을 쓸 수도 있고 만약에 좋은 투자 대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심사하고 공모받고 하는 과정에서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투자 전략의 문제인 거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 미투자액이라는 게 무조건 당장 어떤 투자 대상이라도 빠르게 찾아내서 투자를 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한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도 미투자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투자를 못 한 게 아니라 지금 물색하거나 기한이 안 돼서 안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걸 투자하지 않은 걸로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소영 위원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결국 자펀드에서 투자 대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할 대상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꾸 모태펀드 액수 늘려서 자펀드 구성해 봤자 거기에 우리 예산만, 재정만 묶여 있지 실제 그만큼의 저기가 없다.

그런데 아까 조정훈 위원 얘기처럼 지금 정부가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펀드다 또 AI다 하는데 실행 가능한, 시장에서 수요가 없는 부분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저희들 지적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그거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펀드가 자기투자를 못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투자가 되는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도 죄송한데 한마디만……

○**소위원장 한병도** 예, 말씀해 주세요.

○**김한규 위원** 이게 모태펀드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올 걸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운용하는 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왜 그해에 투자하지 않았냐는 문제가 나오니까 정부가 직접 투자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자펀드를 만들어서 자펀드에서 돈을 갖고 있다가, 자펀드는 한국벤처투자에서 개별적으로 투자할 운용 회사들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다 맡기는데 만약에 우리가 구조 자체를 펀드 조성하고 나서 1년 내에 투자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 그렇게 투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모태펀드라는 것 자체가 그해에 반드시 투자하도록 약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받아서 운용하는 회사들은 자기가 4년 내든 5년 내든 이 기간 내에 가장 수익이 나는 곳을 찾아서 그때 캐피털 콜을 해 가지고 민간이 이런 데 투자받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계속 왜 그해에 모태펀드가 투자 안 했냐라고 하면 운용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부에서 위탁을 받을 때 재량을 가지고 4~5년 내에서 가장 적시에 투자 기관을 찾아서 투자하도록 해 놓고서 왜 올해 투자 안 했느냐고 하면……’, 그것은 모태펀드의 취지랑 안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비판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앞으로는 모태펀드 구성 자체를 산중위에서 한국벤처투자에 맡길 때 자펀드가 1년 내 내지는 2년 내에 투자하도록 산중위 차원에서 제도를 바꾸도록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투자 잔액이 있다고 해서 다음 연도 자펀드에 대한 신규 투자 자체를 그 금액만큼 줄이는 것은 모태펀드 제도에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84페이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지특회계(지역지원계정) 세출 감·증액 사업 1건이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시범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 중이므로 국가시범사업은 시급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1703억 37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이후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이하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국비보조를 상향 및 대상지역 확대 등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상임위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유는 좀 전에 기재부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

타를 마쳤고요. 지금 적정성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 추진을 할 거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 내에서 생태계를 살리는 그런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굉장히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의하면 굉장히 길어질 텐데 그냥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고 문제의식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적이 뭡니까? 이 돈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을 한 줄 요약하면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어려운 말씀이지만 농촌 내에서 경제 일자리, 생활서비스 생태계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지금……

○조정훈 위원 다시요. 생태계를 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농촌 내에서 경제 일자리, 사회서비스 생태계를 살리는 게……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뭡니까, 두 번째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공공서비스, 그러니까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공급이 생겨나고, 왜냐하면 수요가 생기니까 공급이 생기고 공급이 생기면 또 수요가 생기고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돈을 그 동네에 쏟아부어서 투입해서 유동성을, 지역적으로 투입해서 유동성이, 그러니까 돈이 돈을 돌게 만들겠다 이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게 해서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한번 해 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기본소득이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할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이미 시범사업 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연천군 청산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지금 22년부터 경기도가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지요? 지금 벌써 4년 됐습니다. 거기 이 시범사업의 중간 결과는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평가를 했는데 평가 결과는 긍정적입니다.

○조정훈 위원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목표는 뭡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마 같은 취지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다릅니다. 정확하게 다릅니다.

전라남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범사업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시범사업이라면, 경기도에서 5년 사업이 내년이면 끝나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조정훈 위원 전라남도도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도 또 끝납니다. 각 지자체에서 꽤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68억·40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 검토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확실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면 저는 전국에 확대하는 것 찬성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책 목표는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목표니까. 그런데 이것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시범사업 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69개에다가 또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닙니다. 올해는 7개고요.

○조정훈 위원 죄송합니다, 7개.

그렇게 하고 정책 목표도 조금씩 다르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정부질문에서도 많이 했는데 이 대상이 농민에게 국한된 것도 아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농어촌 주민입니다.

○조정훈 위원 어떤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시장·군수에게도 다 주고 시군구 의원도 다 받게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당연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농림부 사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인구 소멸된다면 도시에다 맞을 수 있고, 이것은 행안부 사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닙니다. 저희 법이 2개 있는데요 그 법상 농어촌 주민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은……

○조정훈 위원 아니, 농촌 주민의 복지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사는 문제니까요. 농촌 공간과 농촌 주민에 대한 복지 문제는 법에 따라서 농식품부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보편적 복지로 가는 하나의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여기 논의하면 하루 종일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그래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수백억 들여서 하는 시범사업의 결론을 보고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희가 연천군 22년·23년 시범사업 2년간의 평가 결과가 있고요. 그것을 참고했습니다, 위원님.

○조정훈 위원 끝나지도 않은 사업을 뭘 참고했다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중간 평가를 했습니다, 22년·23년.

○조정훈 위원 저는 이것 보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잠깐만, 강승규 위원님 듣고 이재관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 이렇게 듣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저도 농업 기반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어떤 형태든 기본소득이든 소멸해 가는 농어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농업직불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어민들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

들이 퇴직하고 300평의 농토를 구입해서 직불금을 수용하고 합니다, 물론 텃밭 수준인데.

그것이 꼭 나쁘다기보다도 실제 농어촌의 농민들의 어려운 일들에 기본소득도 필요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약간의 보편적 복지처럼 그냥 농어촌 기본소득 해서 이 돈을 뿌릴 때 실제 그게 농어촌 살리기를 하는 것이냐, 그런 면에 저희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할 때는 아까 조정훈 위원님이 내세운 시범사업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면밀히 해서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해서 시범지역 어디 한번 뿌려 보자, 선거 있으니까 또 뿌려 보자 이것은 정말 공직자분들도……

이게 정권의 여러 가지 전략사업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정말 실제 농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죽어 가는, 소멸해 가는 농어촌의 농어민들에게 기본적으로 뭔가 소득이나 이득이 있어야 된다. 저는 사실 농업직불금도요, 30년, 40년 농사를 지으시다가 75~80세가 되셨는데 직불금을 타기 위해서 농사를 못 농습니다. 그런데 그 농토는 청년들에게, 귀농인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지연됩니다. 그분들에게는 저는 오히려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직불금이라는 명목으로 주지 말고 그것을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그런 분들한테 줘서 그분들이 농사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청년들에게 대농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설계를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그냥 뿌리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경영이양직불 해서 은퇴하시도록 하고요. 소득을 보전해 드리고 있고 그런 것도 많이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차관님, 농어촌 기본소득이 복지사업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마 복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뿌리는 현금성 아니냐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재관 위원 복지사업이라고 이 사업을 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멸하는 농촌을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키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농업이라는, 농촌이라고 하는 가치, 기후위기 시대 또 식량안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촌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복지사업, 시혜사업으로 접근을 하게 되다 보면 고소득자들에게 과연 줘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리고 그런 지속가능한 농촌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시범사업의 콘텐츠들이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저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종합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시행을 할 때 그 내용들이 잘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이게 4 대 6, 국비·지방비의 비용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 지역 7개 지역이 보니까 지방 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지역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맞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중

단해서 이쪽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 기본소득의 시범사업의 성격에 안 맞는 효과로 연결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효과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비 부담비를 지금 현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높여서 지방재정에 이 사업으로 인한 지방의 손실, 어떤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저는 우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시군에서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조계원 위원님까지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직불금은 농업인 기본소득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기본소득으로 장기적인 방향성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농어촌의 소멸을 막기 위한 기본소득이고……

○**강승규 위원** 농어민이어야 됩니다.

○**조계원 위원** 농어촌의 주민.

○**강승규 위원** 촌으로 가면 아까 군수도 받고 다 받으니까.

○**조계원 위원** 아니요, 농어촌. 농어민이 아니라. 이거는 농촌,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고, 이거는 독일이나 이런 데서 지금 비슷한 정책들을 하면서 농어촌을 살리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그런 사업 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걸 우리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맞게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걸 전국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지역별 특성이 있으니까 그걸 시범사업을 통해서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농어촌이 지금 소멸하고 있고 농어촌이나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너무나 낮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이 낮은 거기에 지금 60%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어요. 최소한 정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오히려 50% 이상 늘려야 된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지특회계(지역자율계정) 세입 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기타재산 이자수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보통예금에 단순 예치하는 그 건인데요. 아까 농특회계 때 이 건을 보류하신 바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출 감·증액 사업 1건입니다.

농식품 소비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지원 예산이 유통업체에 귀속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었고 소비촉진 예산을 농안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108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고 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임미애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이후에 자체할인 의무라든지 또 사업 전후, 그러니까 2주 전, 2주 후 가격을 모니터링해서 올리게 되면 페널티를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충분히 많이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을 깎게 되면 소비자들께서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은 제가 작년부터 여러 차례 집행방식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래 애초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던 사업이고요. 논의 과정에서 집행 방식을 바꾸겠다고 여러 계획안이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철회하고 향후에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석님, 무슨 말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위원님이 방금 감액 의견을 철회하셨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정부 원안.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정부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원안을 유지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기금 지출 감·증액 사업 1건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마지막 사업입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융자)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15년간 사업을 운영한 결과 50개 융자기업 중 절반이 폐업하는 등 실적이 저조하고 품목 역시 곡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충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오일팜 등으로 변질되어 대기업의 영리 목적에 사용되고 있어 부적절하므로 2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

고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정부안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 사유는, 임미애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으시고요, 다만 이 사업이 2008년에 시작됐는데 2015년 이후에는 15개 기업 중에 14개 기업이 지금 살아남아 있습니다. 다만 오일팜 같은 걸 왜 하나면 팜유 같은 것은 식용유를 대체합니다. 이건 전량 수입이고요. 이 가격이 오르면 라면이나 빵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법에다 집어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내년에 이 사업을 신청한 기업들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몇 개 정도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보통 선정은 3개인데 내년에는 10개사가 신청을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10개사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임미애 위원 주로 어떤 작물을 재배하겠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은 밀도 있고요, 배추·콩·카사바·대두 많이 있습니다. 작물은 다양합니다.

○임미애 위원 남아 있는 25개 기업의 경우도 사실은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작물을 재배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10개사의 신청, 주로 들어와 있는 작물은 어떤 거라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 법에 있는 작물 외에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임미애 위원 그게 내용이 뭐예요? 법 범위 안에 어떤 작물이 들어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해외개발 사업을 하면 법에 작물이 규정돼 있고요. 거기 보면 밀·콩·옥수수·카사바 이런 것들이 다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왜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임미애 위원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왜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랬지요? 이해가 잘 안 가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만약에 목적 외로 쓰면 아마 이게…… 물론 융자금이라서 다 회수는 했겠지만 목적 외 사용이 됩니다. 저희도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아마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럴까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의견 하나만……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혹시 아까 해외농업자원개발 하는 데 콩 등이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는 데요. 여기 지원 대상의 작물 재배에 콩이 들어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콩이 남아돈다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현재 국산 콩이 남아돌고……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논콩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승규 위원 아니, 제가 이것과 꼭 관련되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보니까 쌀이 남아돈다 그래서 콩이나 가루쌀 등으로 대체를 하라고 해서 지원, 그렇게 정부 정책을 해 놓고 실제 어느 신문에도 났는데 충주인가 청주인가는 가루쌀 공장을 만들었는데 10%도 가동이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니까 가루쌀 생산해도 지금 창고에 갖다 쌓아 놓고 있지요, 그것?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강승규 위원 나중에 버릴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닙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제 얘기 좀……

내가 짧게 얘기해서, 콩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자원개발도 좋고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농산물의 수입이라든지 우리 국내에서 제작되는 것들이 어떻게 생산돼서 그것이 어떻게, 소비를 빨리 촉진하는 이런 전체적인 프레임 가지고 농식품부가 움직여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쌀 남아돈다고 쌀 뭐 해서 콩 대체작물 하고 그것에 대한 판로나 이런 것들은 또 그냥 내팽개치는 그렇게 되면 이것도 똑같이, 임 위원님 다른 차원에서 지적을 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콩을 100만t을 수입합니다, 1년에. 그건 수입하는 콩이고요. 국내 시장에 있는 콩하고는 다른 시장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지는 않지만……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농림부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아, 농림부 끝났나요?

더 이상……

○김대식 위원 퇴장하기 전에 제가 다른 건데 30초만 저한테 시간 주시면……

○소위원장 한병도 제가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김대식 위원 차관님, 지금 반려견 1500만이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각 대학들이 지금 반려견 학과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농축산식품부에서 반려견협회에다가 전권

을 쥐 가지고 갑질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 거기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자기네들이 1500만…… 왜? 어느 A 대학에서 평가비를 1억씩 내고, 9000만 원 씩 내고 해 가지고 평가받는데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 차관님이 한번 불러 가지고 어떤 프로세스로 하느냐 이것을 한번 신중하게…… 내가 대정부질문에서 하려다가 안 했는데, 일부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동물보호사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관리 감독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잘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이승돈입니다.

○농촌진흥청기획조정관 이상호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이상호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농촌진흥청, 130페이지입니다.

1번, 농업농촌국민체감AX전환기술개발(R&D),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빈집·유휴시설을 활용한 재생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빈집은행 등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문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 기능과 부합하지 않은 사업임을 감안할 때 21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본 사업은 지난 5월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가 발표한 범정부 빈집종합계획에서 전국에 있는 139개의 소멸 예상 기초단체의 7만 8000호의 농촌 빈집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부와 청의 협력 R&D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의 내역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개는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농촌지역 생활편의 개선 실증모델 개발이고 우리 청에서는 빈집·유희시설 활용 농촌재생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전국 농촌의 빈집 재생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농촌공간 재생정책 의사결정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농식품부 농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사업은 빈집 정보 제공, 리모델링, 복합단지 조성에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서는 민간 플랫폼에서 수집이 곤란한 빈집 안전등급 그리고 도로, 교통, 마트, 미용실 등 주변 생활여건과 같은 데이터를 추가 확보하여 공간정보 표준화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 연구기관과 부합하지 않다는 것인데 저희 농촌진흥청 소속의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촌환경안전과에는 농촌재생 연구와 농촌공간계획 연구를 하고 있는 1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하고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안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제가 이것 관심 많고요. 빈집 관련해서 법안도 냈고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도 열었습니다. 뭐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나오는 키워드를 좀…… 농촌 빈집 관련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공간정보 등을 집대성하고 그래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는데 아무리 AX가 어떤 분야든 AI를 해서 데이터의 여러 가지 수집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분석력을 높일 수 있어서 한다면 좋지만, 업그레이드되고 효율성이 늘어나겠지만 지금 농촌의 빈집 정보를 가지고 AX를 해서 효율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빈집 현장에 대한 그것이 반영돼 있는 건지 솔직히 이것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막연하게 의혹을 갖는 겁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지금 전국에 있는 7만 8000호를 전부 다 재생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7만 8000호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139개 시군 중에 지금 한 10개의 시군을 골라서 마을재생사업을 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재생사업 모델 하는데 아까 농촌지역의 생활 개선 모델이든지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갑자기 AX 전환과 함께 빈집마저도 AX에다가 넣는 게…… 지금 빈집은 다른 근본적인 문제와 훨씬 더 연관돼 있고 이것을 무슨 정보, 데이터를 구축해서 뭘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빈집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생활…… 아까 여기 보면 다른 곳에는 생활인구 유입 또는 청년들, 어떤 정책과 연계해서 빈집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까지는 그런데, 이것을 AX로 전환해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솔직히 아무리 좀 이해하려 해도 안 와닿아요.

제가 이것 법안까지, 내가 엇그제 세미나도 했더니깐요. 우리 한 젊은 친구가 장항선 프로젝트라는 것을 저한테 제의를 하고, 이게 뭐냐니까 장항선을 따라서, 서부지역의 철도를 따라서 서울에 있는 생활인구 아니면 청년, 귀농·귀촌객 등을 장항선 주변의 빈집으로 다 유입을 해서 빈집 활용도를 높이자 이래 가지고 제가 그것 좋다 그래서 세미나까지 하고 지금 우리 농림수산부도 왔다 가고 다 왔다 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데이터도 있을 수도 있고, 있다 그래요. 그러나 이것에 AX 넣어 가지고 이러면 이것 다 AX, 정부에서 대전환한다는 것, 효율성 그런 부분에서 설득력이 더 떨어져요. 이런 건 좀 제발 잘

라요. 안 그렇습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김대식 위원님 하고 임미애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청장님!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예.

○김대식 위원 저도 여기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제가 농어촌공사의 이사회 의장을 좀 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시골에 빈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부 어느 정도 군 단위로 데이터가 돼 있어요. 군이 이렇게 복합……

제일 중요한 게 강승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기재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이렇게 있어요. 제가 제일 의문시하는 거는 총리실에서 그렇게 하라고 몇 번 했는데 몇 년 동안 되지도 않은 건데 한상대회, 외교부에서 하지요. 그다음에 OKTA, 산자부에서 하지요. 그다음에 월드킴와(World-KIMWA), 성평등부에서 하지요. 이런 것으로 복합이 되니까 예산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농어촌공사, 농수산물식품부, 기재부, 농촌진흥청이 어느 정도 저는 좀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군 단위의 데이터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군이 안 해도.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지금 저희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관들하고는 3년 전부터 농촌다움 포럼을 통해 가지고 계속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 단위의 농촌공간계획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빈집재생 이쪽이 좀 농촌다움 포럼에서 약하다고 해서 이쪽에 R&D를 통해 가지고 재생하는 어떤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은 차라리 나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농토, 유휴지가 있으면 농어촌공사에서 사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집이 팔려 있거든, 시골에 가 보면.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이 있는데 거기 앞에 전부 농토야. 농어촌공사에서 이걸 따로 하고 농진청에서 이걸 따로 하고, 이거는 저는 뭔가 하나로 좀 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업을 종합적으로 해서 진행될 때는 그게 맞는데 그 전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고 R&D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예산 투입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21억이라는, 저희 쪽에서 많은 돈인데 이걸 투입해 가지고 미래에 나가는 예산을 줄이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똑같은 의견이 또 나오겠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나는 그것을 좀 조율을 하라, 부처별로. 부처이기주의 하지 말고.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위원님,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것 농식품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부·청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역사업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태우고 하나는 저희들이 태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운 것에 대해서만 이번 에 좀 지적이 있으셔서 가지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청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 중에 전국에 있는 7만 8000

호 빈집에 대한 DB를 작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 DB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나요?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지금 현재 민간 플랫폼 같은 데는 위치정보 그리고 매매정보, 가격정보 그런 것만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지금 이 빈집이 과연 안전한가, 안전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이 재생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정보와 또 하나는 한 집만 되는 게 아니라 마을 단위 전체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집 근처에 도로가 어떻게 돼 있고 또 마을버스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미용실이 있는지, 목욕탕이 있는지 그것까지도 다 같이 해서 과연 그러면 거기에서 도시민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그것까지도 같이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요. 경기도가 일종의 주택거래의 수요와 공급의 그것을 맞춰 주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하겠다고 한 정책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AI를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초정보 이외에 실거래가뿐만이 아니라 이 집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까라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라는 데가 농촌지역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다 보니까 저는 이 일을 하실 때는 경기도와 좀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하면서 그 모델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마 경기도는 부동산원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약 7000호 정도의 빈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보까지 다 들어가고 나중에, 부동산원에는 빈집이라는 민간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이 이 데이터가 다 합쳐지면 그쪽으로 데이터를 다 해서 나중에 수요자가 활용하는 것은 그 민간플랫폼에서 활용을 할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빈집 정책이 자꾸 실효성이 없고 계속 반복되고 법안이 나와도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소유권 문제 때문이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예.

○**임미애 위원** 이 문제가 법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걸 어떤 정책이 나와도 사실은 DB는 구축할지 모르지만 정책의 실효성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소유권 문제, 활용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인지도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임미애 위원님 질의에 저도 좀 덧붙이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기초정보 이외 추가정보를 구축하겠다, AI를 통해서 안전정보, 소유권정보, 재생가능 여부 등 이런 것 AI로 데이터화가 가능합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요, 저도 빈집을 가지고 있다가 좀 고쳐 놔는데 형제들끼리 분산돼 있고 소유주가 동의 안 하거나 이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도 못 하는 것과 또 이 주택이 재생 가능한지 일일이 다 현장을 확인해서 데이

터를 넣어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 등이 실질적으로 AI를 구축해서 그런 데이터를 다 모아 놓는다고, 또 실제 AI를 통해서 그런 모든 소유권정보라든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연락이 안 되거나 뭐나 해서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이걸 시범사업이든지 뭐든 구축한다고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프라인 기반의 작업이 더 많이 있고 실제 그런 것이 막혀 버리면 재생 가능한지 여부, 소유권정보 이런 것 등을 다 해서 DB를 다 구축했을 때 그 정도로 실제 그게 활용도가 높은 건지, 청년들이 이 빈집에, 이 집으로 가고 싶은데 이게 재생 가능한지 아니면 소유권이 누구인지 이게 없어서 빈집이 덜 활용되는 건지 저는 그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훨씬 더 빈집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다른 정책 등이 더 급한데 이것 그냥 플랫폼 구축해 놓는다, AI 기반의 플랫폼 정도 된다, 플랫폼이라는 말이 그렇게 모든 것을 통용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책 효과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위원님 걱정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 항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농촌진흥청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더 이상 의견이 없으니까 농촌진흥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들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산림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산림청장 김인호입니다.

○산림청기획조정관 이종수 기획조정관 이종수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 오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산림청은 감액심사 대상 사업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으므로 산림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입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해수부 기조실장 김재철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 오세요.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74페이지 해양수산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 사업 2건 있습니다.

먼저 1번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개 부처에 공통적으로 편성된 사업인데 오전에 농림축산식품부 심사 시 이 사업에 대해 보류하기로 결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같이 보류하는 걸로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소영 위원 한 가지만……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보류에는 이견은 없는데요. 아까 농림부 사업도 마찬가지로였고 이게 지금 국비가 80%, 민간이 20%인 공모사업인 거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아까 농림부 사업 중에서도 AX 전환 사업이 있고 AI응용제품 상용화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들이 있는데 AX 전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비율이 50%잖아요? 그렇다면요, 해수부에서는 없어서 모르실 수 있는데.

그런데 국비 지원비율이 80%다, 공모에서 선정되는 민간이 20%밖에 부담을 안 한다 라고 하는 게 상당히 국비 지원비율이 높은 편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까지 이례적으로 높게 한 이유가 있나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저희 해양수산 관련 기업들은 아직은 대체로 영세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국비 지원을 확대해서 신속하게 민간에 사업 상용화를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게 지금 해수부뿐만 아니라 10개 부처가 다 국비 80이거든요. 혹시 기재부에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국비 이런 사업을 할 때 통상적으로 매칭을 할 때는 한 30% 정도 하는 경우가 통상적인 경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기술은 있는데 시장에 상용화시키지 못하는 중소기업들 위주로 저희가 지금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20%만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 정부안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런 내용 포함……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소영 간사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깐 한말씀드리면 아까 농림부 사업도 얘기를 드렸지만 국내시장 규모만을 생각한다면 사실 기술력이 있어도 제품을 상용화하기 어려운 현실이 해수부 사업과 농림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강승규 위원 저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소위원장 한병도 예.

○강승규 위원 왜 AI응용제품 등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가 10개 부처에서 대규모 편성해서 저희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느냐면 이런 부분이 기술력이 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서 중소기업 등이 대부분 해당되기 때문에 응용화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논리이신데요.

그것을 좀 뒤집어서 보면 그 기술력이라는 것이 중소기업이나 현장에서 그렇게 적절한 기술인지 또 그게 그냥 무늬만 AI인지 또 일반의 스마트 센서, IoT 이런 제품의 AI 이름을 단 약간의 마케팅 버전인지 이런 것 등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혼재돼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9000억, 8000억 이렇게 쏟아부을 때 굉장히 재정의 낭비 그리고 실제 AI 전환이라는 대전환과는 다르게 이 사업이 변질될 수 있어요.

지금 또 두 분의 여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민간의 부담비를 20%로 하고 국비를 80%로 했을 때 솔직히 재정을, 돈을 또 뿌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이 우려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참고로 지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지적사항 포함, 보류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해양모태펀드입니다.

내역사업인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200억 원 신규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존 해양모태펀드의 미집행액과 27년도부터 회수되는 자펀드 청산금액을 고려할 때 50%인 100억 원을 삭감하여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1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해양수산부는 정부안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차관님, 기존 해양모태펀드가 총 1522억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누적 투자율이 53.1%에 불과해요. 겨우 반이 조금 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 신규로 200억 원을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한다? 이걸 조금 뭐가……

한번 보세요. 2019년부터 21년까지 투자율이 평균 84.2%였으나 2022년부터 24년까지 투자율은 23.8%로 급락을 해요. 이게 미투자 구조가 심각한데 투자기간이 평균 4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출자금을 일시납 형태로 반영하여 예산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말이지요.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또 이미 미투자가 확정된 116억 원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2027년부터 청산금 유입이 예견되잖아요. 그런 상황이지 않아요. 거기서 추가로 200억 원을 또 편성한다? 이걸 좀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2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 한 50%만 해서 한 100억 원 정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 하나씩 말씀을 올리면 우선 19~21

년까지 조성된 펀드 미투자액 116억이 있다고 하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 예산에 남아 있는 것은 대부분 운영경비로 써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조성된 펀드는 이미 약 85% 정도 투자가 돼서 이걸 충분히 투자가 됐고요.

22~24년까지 조성된 펀드 투자율이 한 24%로서……

○**김대식 위원** 23.8%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23.8%로 조금 낮은 부분은 사실과 맞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은 이미 투자처에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 구성을 해서 투자할 계획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 신규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다는 말씀 올리고요.

펀드가 투자를 한 4년씩 나눠서 하는데 첫해에 이렇게 다 한꺼번에 반영하느냐 하는 말씀 주셨는데 저희 해양수산부는 과거에 한 6년간 모태펀드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당해 연도에 모두 자펀드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투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투자기간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50% 갖고 시작을 해 보는 게 어때요? 한 50%, 200억이니까 100억을 삭감하고 100억 가지고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규모를 해야 자펀드를 잘 구성을 하고 투자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민간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묻고 수요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적어도 한 200억 정도는 있어야 의미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200억을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대식 위원** 해양부에서 전문가들 데리고 그걸 한번 시뮬레이션해 봤지만 우리도 시뮬레이션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 100억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아시겠습니까마는 우리 바닷가에 있는 기업들이 아직도 조금 열악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펀드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소위원장 한병도**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제가 제안을 좀 드려 보면요, 오전에도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에 대해서 같은 취지의 감액의견이 있었고 자펀드 결성 이후의 미집행액에 대한 정책적인 평가가 지금 상이한 차원에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이 건도 같이 보류를 하고 이후에 나오는 모태펀드 출자에 대한 같은 취지의 감액의견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정훈 위원** 간단한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할게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조정훈 위원** 차관님, 19년부터 지금 하는데 모태펀드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수익률이요?

○**조정훈 위원** 예, 연평균.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저희들이 청산을 해 봐야 수익률을 알 수 있는데 아직은 다 존속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수익률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어쨌든 기왕에 투자된 기업들이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는 저희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평균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자펀드별로 한 150억에서 300억 정도, 조금씩 틀립니다만.

○**조정훈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자펀드에서 기업으로 내려 줄 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아, 기업으로요. 기업에 투자하는 건 평균적으로 한 20억 정도……

○**조정훈 위원** 20억 내외?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10년 투자?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4년 투자……

○**조정훈 위원** 27년부터 돌아온다는 거지요, 청산 금액이? 27년부터 청산해서 들어온다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27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펀드가 2개가 나오는데요. 이 청산하는 데 절차가 또 한 1년 반 필요해서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한 28년 하반기 정도다……

○**조정훈 위원** 투자 수익은 자신 있으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건 저희들 잘 선정을 해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성과가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27년부터 보겠지만 손실 나면 절대 안 되실 겁니다, 이것.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비상장 회사니까 중간에는 수익률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청산하기 전까지는.

○**조정훈 위원** 예, 이해합니다, 청산되어야지 오는 거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해양모태펀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세입 증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입니다.

25년 9월 말 현재 이미 세입예산 226억 9900만 원의 2배가량인 435억 400만 원이 정수 결정되고 316억 7500만 원이 수납되었으므로 26년 예산안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저희들 최근의 가장 최신 데이터인 24년에 그다음에 최근 수

납액 중에 최대 금액인 371억을 이미 세입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정부 원안 유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보류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도 보류할까요?

○임미애 위원 원안 유지라는 말은 그러면 그냥 두겠다는 얘기에요, 증액이 아니고?

○조정훈 위원 그렇지요.

○김대식 위원 그냥 두겠다는 거지.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저희들이 올해 지금 열심히 징수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최대한 하면 한 400억 정도까지 조금 올릴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아직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가지고요.

○임미애 위원 징수 결정된 금액은 435억이에요. 그리고 435억 징수 결정이 되고 나서 지금 316억이 걷힌 거예요, 이미.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실제로 저희들이 해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지자체 추경 문제라든지 채원 문제가 있어서 전액을 받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쨌든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일단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추경 때도 우리 얘기했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받아야 될 금액을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돈을 갚아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집행을 안 하면……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자체에서 이것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편성하거나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하여간 저희들 다 받아 낼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우리 추경 때, 결산 때도 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간사님들하고. 지자체가, 그래서 부대의견까지 강하게 단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 징수 결정이 확정되면 지자체는 채무가 생긴 거고 중앙정부는 채권이 생긴 겁니다. 일반 국민한테 징수 안 하면 과태료 물고 벌금 과하고 법적 조치 취하면서 지자체라고 이렇게 느슨하게 두시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시도에……

○조정훈 위원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조정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일부만 책정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수납한 금액의 최고 금액을 반영했다는 말씀 올리고요.

○조정훈 위원 아니, 징수결정액이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35억으로 확정된 것 아

납니까? 그러면 435억으로 확정하고 예산 수입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 지자체별로 이유를 물어야 되고 그게 예산 당국과 중앙부처의 역할이지 지자체 사정 봐주느라고 이렇게 계상을 안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국가에 낼 세금, 돈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조정훈 위원** 공무원들끼리 서로 봐주기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조정훈 위원** 그렇지 않기는 뭐가 그렇지 않아요? 똑같지.

저는 이것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결정액 전액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이게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 때도 지적이 나왔던 사안이고 저희가 아직 결산이 최종 의결돼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중간 논의 상황을 좀 알려드리면, 이게 개별 부처의 어떤 개별적인 판단이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기보다는 행안부·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환수체계가 좀 미흡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범정부 차원의 환수체계 구축을 이번 결산 의결의 취지에 따라서 하기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별 부처보다는 기재부랑 또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서 아마 이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이견을 고려해서서 보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도 보류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마지막 심사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특이사항에 1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국가 어업 AX 플랫폼,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출자하는 방식인데 정부 출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출자금으로 편성된 100억 원을 출연금으로 비목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해수부는 비목 변경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는 어떤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어촌어항법의 규정을 봤을 때 비목을 변경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대식 위원** 저……

○소위원장 한병도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막 통과해 가지고 지나갔는데, 217페이지.

○임미애 위원 이 부분 마무리하고 들어가시지요.

○김대식 위원 그것 마무리했으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잠깐만, 그러면 이건 비목 변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 마무리하고, 그다음 몇 페이지요?

○김대식 위원 217페이지, 평택·당진항 이것 해수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 제가 쪽 보니까 해수부에서 몇 년 동안 계속 반대했던 사업인데요, 지역사업인데.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이 사업의 어떤……

○김한규 위원 증액 사업이네요?

○김대식 위원 아니, 이것 삭감이야. 내가 삭감을 넣었어, 삭감. 14억을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넣었는데 증액으로 잘못 들어왔다고.

217페이지 5번,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반대한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지금 5번 사업의 첫 번째 사업인 잡화부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4억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대식 위원 예.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이건 정부안에는 안 담겼고요. 지금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이 됐고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증액 제기를 하신 사업입니다. 정부안에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감액, 14억 감액으로 넣었는데 이게 지금 증액으로 잘못 나와서……

○소위원장 한병도 여기 안 들어왔어요, 책자에. 그건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부안에 없어요.

○김대식 위원 정부안에는 없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없다니깐요.

○김한규 위원 정부안에 14억이 아예 없다는 얘기잖아요.

○김대식 위원 아예 없지요?

○김한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오케이.

○김한규 위원 없던 얘기.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끝났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해양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해양경찰청장 김용진입니다.

○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직무대리 김시범 기획조정관직무대리 김시범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242페이지 해양경찰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증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기타재산 이자수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해경의 26년 연구개발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5억 3600만 원 증가한 761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바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증가함에 비례하여 연구개발비 예수금 이자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입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증가한 예산만큼 세입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증액 동의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3억 4600 증액 의견에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다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얼마만큼의……

○소위원장 한병도 3억 얼마였지?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3억 4600만 원 증액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억 4600만 원 증액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2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이 안전지킴이에게 활동비, 피복비, 활동물품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의 세 번째 줄입니다.

순찰드론 도입 예정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감소 가능성 및 지자체 채원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26년 증액분 8억 4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8억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지금 현재 1만 5600km 해안선 중에 해경 파출소 직원들이 일일 순찰하는 것은 한 1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위험 구역에 대해서 현지에서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을 저희가 위촉을 해 가지고 각 파출소별로 6개월간 일일 3시간씩 위험

구역을 순찰하고 주민들 계도도 하고 안전시설물 점검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그간에 일일 3시간밖에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 요청에 따라서 4시간으로 늘려서 좀 더 위험 구역 순찰을 확대하고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연안에서 매년 10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고 이 연안안전지킴이가 배치된 곳에서는 사고율이 40% 정도 감소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론은 장기적으로 많이 확보하겠지만 현재 단기적으로는 연안안전지킴이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은 그대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 최형두입니다.

이건 청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고 하는데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전부 증액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처 예산을 자꾸 증액만 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은 특히나 드론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그만큼 실효성이 높아질 테고 지금 드론을 도입하게 되면, 77대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보완점이 있기 때문에 지킴이 감소 가능성이 있고 또 지자체 재원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할 필요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증액만 하는 건 없습니다. 부처 예산을 일부 감액해 주는데 해양경찰청 정말 우리가 봐줘서 딱 일부만, 이 부분은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감액으로 지금 의견을 낸 겁니다.

나머지 전부, 과학수사 역량강화, 경비대테러 역량강화 다음에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별도로 연안안전사고, 파출소의 연안사고 대응력 향상을 위한 이런 새로운 증액 예산이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액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규 위원 여기에서 일부를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여러 개 중에 일부로 이것만 감액하자는 뜻인가요?

○최형두 위원 아니, 아니요. 이것만 감액……

○김한규 위원 이걸 전부 다?

○최형두 위원 예. 나머지 증액 많습니다. 바로 아래 보면 56억짜리 증액안도 있고요. 여러 해경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증액 예산안이 많습니다. 저희 동네도 해경이 있어서 해경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위원님,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드론이 많이 도입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 줄일 여지가 있는데 내년도 드론이 5대가 도입됩니다. 전국 96개 파출소 중에 다섯 군데만 드론이 배치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연안안전지킴이 효과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3시간 활동으로는 불과 7~8km 내외밖에 순찰을 못 합니다. 한 4시간으로 늘려 줄 수 있도록 꼭 좀 이걸 감액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보류하시지요.

○이소영 위원 보류하시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이것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드론 한 대당 얼마나 합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55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석님,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해경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끝났나요?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다.

해양경찰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복지부 1차관 이스란입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복지부 2차관 이형훈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오세요.

수석전문위원 보고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소위자료 2권의 3페이지 보건복지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5건, 감·증액사업 8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내실화를 위하여 26년도 신규 프로젝트가 10개가 있는데 10%에 해당하는 2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복지부 의견입니다.

우리 부는 감액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억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4페이지 2번,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기반 스케일업 지원(R&D),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바이오헬스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인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세 번째 줄입니다. 기존 사업을 활용·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4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복지부는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예.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사업은 공공기관 중심의 국내 지역 창업 인프라를 지원·연계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기반 스케일업 사업은 병원들 기반의 민간이 시설장비를 활용해서 민간의 비임상시험을 하는 것으로 국내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계한다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사업과는 다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잘 알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복지부 말씀드릴 게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세부사업명을 좀 한글로 쓰십시오. 앞 페이지도 그렇고 지금 ARPA-H 프로젝트 이런 말…… 일하기 싫은 거예요? 이것 하나도 해석이 안 돼요, 사업명 만드는데?

그다음 페이지,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기반 스케일업 지원(R&D) 이것 그냥 영어를 한글로 쓴 것 아닙니까. 한글로 생각할, 그 사업명도 못 만드세요? 이런 게 몇 개나 있는지 제가 지금 다 지적해 볼까요? 보건복지부 유독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알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다음에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기반 스케일업, 이것 참 보건의료 인프라 사업하고 저는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굳이 가르마를 타야 된다고, 2개가 필요하다는 사업이라면 저는 제가 제안한 부대의견을 수용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부대의견은 나중에 따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위원님 말씀 따라서 용어에 주의하고 부대의견을 수용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감액은 철회하고?

○조정훈 위원 철회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아, 감액 철회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 못 들었……

○이소영 위원 부대의견은 별도의 심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조정훈 위원 예, 부대의견도 제안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이것은 철회를 했나요?

○조정훈 위원 예.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정부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3번 글로벌연구 협력지원(R&D)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보스턴코리아혁신연구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특정평가를 진행 중이므로 3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복지부는 감액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6억 원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5페이지의 4번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 신규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의사과학자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11억 원,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의사과학자의 글로벌 연수 및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R&D)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11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복지부는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R&D 사업으로 의사과학자가 박사 취득 후에 독립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 단계별로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사과학자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사업은 지속적인 인재 양성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요청했는데요, 이것은 수용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빚내서 예산 내는 상황에서 11억 원 글로벌 네트워킹, 서로 출장 다니고 만나고 이벤트하고 이런 데 쓰겠다는 건데…… R&D까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글로벌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도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의사분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국가가 11억 넣어 쥐 가지고, 비행기표 주고 항공료 주고 호텔 숙박비 주는 그런 것까지 할 만한 우리의 예산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감액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수용할 때 하더라도 뭔지 내용은 좀 알고……

조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호텔비하고 항공료 그런 것에 국한되는 건가요? 저도 궁금한 건데, 그런데 글로벌 네트워킹이 소관 상임위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된 것을 보면 필요성이 있다고 상임위원들은 본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 사업은 정책개발을 제안하거나 또

의사과학자와의, 의과학자 간의 융합연구를 확산시키는 것 그리고 의사과학자의 교육·양성 생태계의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이면서도 그러한 정도의 경비 지원 사업은 아니고 정책개발 지원이라든가 또 민간의 협력 파트너십, 협력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목적이고 구체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킹이 뭐냐는 말씀이잖아요, 질문이.

○**강승규 위원** 컨벤션……

○**김한규 위원** 행사인가요?

○**조정훈 위원** 사람들 불러오고 사람들 보내고 이런 거지요?

○**강승규 위원** 회의 참석하는 거야.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그런 회의 협력 관계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정책개발, 정책제안도 하고 융합연구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네트워킹 만남도 있습니다. 의과대학의 의사과학자 교육 생태계 혁신이라든가 의사과학자 관련되는 학술대회 개최 그리고 의사과학자 연구 동향에 대한 자료집 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의사과학자에게 주도적으로 요구되는 역할 수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학술대회야 지금도 수도 없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정부가……

○**조정훈 위원** ‘세계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국회의원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하면 머리에 딱 떠오르지요, 우리 뭐 할지? 똑같은 거예요.

○**김대식 위원** 똑같은 거예요.

○**송기현 위원** 아니, 우선 내용을 확인하고 해야지 감액……

11억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설명해 달라 그랬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11억을 어디다 쓸 것인지?

○**소위원장 한병도** 담당 있으면 담당 말해 보세요.

○**송기현 위원** 아니면 네트워크 사업이면 무슨 세미나를 몇 회 한다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교류위원회를 몇 번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지금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정책개발, 정책 제안은 물론이지만 의사과학자 관련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연구동향을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학술대회를 몇 번 한다든지 이런 것 거기에 얼마, 그다음에 자료집 뭐 한다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송기현 위원** 그 세부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세부 내역을.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지금 저희들이 지원사업비로 해서 10억이고 사실 단체 지원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말씀들은 1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억

원 중에 사업비로서 쓰는 부분이 10억 원이고 운영비, 단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1억 원에 해당합니다.

○강승규 위원 사업비 무슨 사업에 쓰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얘기 하네.

○소위원장 한병도 아니, 잠깐만…… 그 옆에 배석한 실무자 있지요? 그 담당이 설명……

○송기현 위원 한번 해 봐요, 구체적으로. 사업이 뭘 사업인지 얘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소위원장 한병도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의사과학자가 저희가 18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임상진료로 가고 있지 어떤 과학자로서……

○송기현 위원 아니, 그런 얘기 말고……

○조정훈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으니까……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정은영 그래서 하는 사업은요, 저희가 한림원 같은 데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하기 위한 의대협하고, 대학원 대학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 그다음에 한림원과 이 의사과학자들과 할 수 있는 그런 협업할 수 있는 것 하고요. 의사과학자들의 R&D를 의과학자나 같은 의과대학에서 의사 말고 다른 과학자들과 확산하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민규 위원 그것 비행기값, 호텔비는 아직 모르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런 거가 있다면 몰라도 그냥 보류하시지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정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민규 위원 남은 한림원 관련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정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게 100억 중에 상당 부분은 그렇게 갈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의사과학자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11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산 내역이 없거나……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정은영 아니요, 한림원이랑……

○조정훈 위원 거의 내용이 맞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정은영 사업은 구체적으로…… 한림원하고요, 의학회……

○조정훈 위원 이것은 보류하시고요, 위원장님…… 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정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저희 의원실로도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다 보류해 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정도는 깎아야지.

○김한규 위원 아니, 간사가 그런 권한을 가지시는 건데……

○소위원장 한병도 조정훈 위원님 방금 제기하신 것 있잖아요,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

일단은 보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정은영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저희 의원실로도 보고해 주세요.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5번, 기초연금 지급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기초연금급여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매년 상당 규모의 이·전용 및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23년에는 약 3305억 원 불용, 24년에는 3904억 원 불용, 25년에는 3926억 원 추정 감액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복지부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의무지출이고요. 앞서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는 부부 감액과 감액 수급자 비율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현실화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 제가 감액 제안을 했는데요. 이게 23조로 보면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난 3년 동안 불용액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전용 금액도 많았고요. 작년에 이·전용 금액이 없긴 했지만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불용액들이 있고 이게 분명히 3000억 원 이상이 고정적으로 불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전용은 해결됐다 할지라도 불용액 부분은 일정 금액이라도 감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다른 데 써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에서 현실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 금액을 좀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고민을 좀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런 요청을 드렸는데 어떠신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감액을 해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부부 2인 가구는 일부 감액을 해서 저희 드리는데요. 그 비율을 올해 8월 가장 실측치로 한다고 그러면 한 200억 정도 가능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하고 같이 받다 보면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을 합니다. 그것도 최신 실측치를 적용하면 한 400억 정도, 그래서……

○김대식 위원 그러면 600억입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거기가 맥스입니다, 위원님. 그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받아 보시고, 보류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논의를 하시고…… 일단 정부가 감액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정부 검토 자료 받아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이것도 아까 이미 부처도 감액 의견을 내 줬고요. 그래서 보류시켰다가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장님, 부탁말씀은 너무 많이 감액하시면 안 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니까 보류한다고요. 그것을 논의하자고요. 지금 부처에서 하신 의견 포함, 함께 더 논의하자고 해서……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일단 기초연금 지급 관련해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한병도 예,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이 불용이 나는 이유는, 이것은 법정 금액이니까 지급대상이 정확하고 사람 숫자도 정확하고 금액도 정확하니까 불용이라는 것은 받아야 될 사람을 못 찾아서 못 준 겁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여기 70%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직역연금 가입자와 배우자는 드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것도 지금 다 계산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불용이 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70%로 소득인정액을 잡지 않고 그 이상으로 잡는데 그 밑의 부분에 해당은 되나 연금을 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추산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하실 때 과거 불용의 이유들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6페이지 6번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39억 원 신규사업은 가칭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하려는 사업입니다.

근거법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에서 심의 중이며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인 설립 로드맵이 완료되기 전인 점을 고려하여 19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고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복지부는 상임위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칭 공공의료사관학교의 신속한 설립 추진 의지 반영을 위해서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증액과 감액에 대한 위원님들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여 예산의 일부가 감액된바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임위 감액안을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20억 증액에 대해서는, 예산이 일부 감액되어 증액을 수용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국정과제인……

○조정훈 위원 증액은 빼고……

○김대식 위원 증액은 빼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19억 원 감액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이 되기는 했지만 보시다시피 여야 위원님들 공히 다양한 증액 의견이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들의 합당한 여부도 함께 살펴서 보류하고 논의했으면 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상임위에서 감액했는데 증액하려면 상임위로 다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동의를 받으면 돼요. 보통 위원장한테 위임이 되니까 위원장이 간사하고 협의해서 동의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이 항에 대해서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7페이지 7번 AI 복지·돌봄 혁신, 신규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장비 도입과 관련된 예산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상임위 의견 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억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8번 바이오 헬스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밑에 내내역사업이 2개가 있는데 각각 나눠서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칸의 내내역사업인 해외 물류기지 구축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입니다.

KOTRA가 주관하는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임 위에서는 90억 원 감액 의견이, 예결위에서는 18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복지부는 상임위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적용되는 특성상 향온·향습 시스템이 구비된 물류창고를 임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OTRA의 범용 물류센터를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KOTRA와 협의하여 다수 물류센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상임위 의견은 수용하셨는데 그러면 전체 예산 180억 원에서 90억을 까면, 죄송합니다. 차감하면 현지 물류창고 2개 임차에서 1개로 줄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 1개로 미국 전체 지역을 다 커버하고 하겠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지금 그 부분은 KOTRA하고 부대의견에 따른 것처럼 KOTRA의 해외공동물류센터와 협력해서 다수의 물류 거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차와 사용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짐작컨대 이 상임위에서 90억을 동의하신 걸 보면 KOTRA에서 진행하는 해외공동물류센터와 기능 면에서 상당히 중복한다는 걸 부처도 인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굳이 하나를 하겠다고 하면 하나를 임차하거나 2개를 임차하거나 사람 보내서 장소 찾고 계약하고 이런 건 똑같은 부대비용이 다 들어갈 텐데 이거 진짜 KOTRA랑 같이 해서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풀필먼트(fulfillment)하려면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과 다른 게 있다고 하면 그쪽 예산 좀 더 들여서 바이오산업의 특성에 맞는 물류 기능까지 하게 만드는 게 맞지 KOTRA 몇 개 만들고 또 보건복지에서 90억 들여서 따로 다른 기능으로 또 만들고 이것은 너무 중복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들이 더 필요하면 KOTRA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쓰는 게 맞지 보건복지부가 무역하는 기관 아니잖아요. 무역의 전문성도 없는데 이것 물류센터 임차하고 물류거점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도 보내고 막 이럴 텐데 이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소영 위원** 밑의 내내역사업도 화장품 관련인데 같이 보고받고 논의를 같이 하면 어떨까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어디,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아래 칸에 있는데, 아래 칸에 다른 내내역사업인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 초청·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자율과 창의에 따라 기획·추진돼야 할 사항인 점을 감안해서 5억 6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 이것 똑같은 항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읽은 그대로예요.

지금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돈 쥐서 하겠다는 건데 이미 한국 화장품 상당히 글로벌화됐고 외국인들 인플루언서한테 비싼 돈 쥐서 브랜딩할 만큼의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걸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진행할 일이지 국가에서 돈 쥐 가지고……

○**소위원장 한병도** 잠깐만요.

이소영 위원님 말씀 듣고 차관님 말씀 들을게요.

○**조정훈 위원** 돈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저도 조정훈 위원님 의견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바이고요.

2개를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고 한 것은, 일단 해외 인플루언서 초청해서 한국 화장품 홍보하자고 하는 것은 최근에 백악관 대변인까지 나서서 한국 화장품 쓰고 나서 피부가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다 이렇게 홍보를 해 주는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까지 책정해서 인플루언서를 초청해야 되는지 저도 좀 의문이 있어 가지고요 이 부분은 저는 조정훈 위원님의 삭감 의견에 공감이 가고.

대신에 해외 물류기지 구축 관련해서는 아마도 소관 상임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당히 이것을 길게 토론해서 내린 결론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임위에서 삭감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임위 의견을 좀 존중해 주면 어떨까 하는 게 의견입니다.

○강승규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차관님 먼저 말씀하시고 박형수 위원님.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짧게 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 초청·홍보는 국내 주요 문화 축제들이, 1~2월에 코리아그랜드 세일 또 6~7월에도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또 10~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이런 등등의 주요 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인플루언서를 초청해서 K-컬처, K-뷰티 전반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는 홍보 활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수의 중소기업이 이런 것들을, 이런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요. 25년에 콘텐츠 제작·생성에 101건 또 그렇게 하고서 매출액 83억 원, 동일한 예산으로 그렇게 효과를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박형수 간사님.

○박형수 위원 해외 인플루언서 초청·홍보, 이거는 저도 조정훈 위원님과 이소영 간사님 같은 의견입니다.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위의 해외 물류기지 이거는 저는 보류를 좀 해서 KOTRA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인지, KOTRA는 충분히 물량을 확보했는지 이런 걸 같이 검토해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 의견입니다, 위엣것은.

○소위원장 한병도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 초청·홍보 이게 올해 2025년에도 했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했던 사업 성과를 잘 얘기하셔서 필요한지 안 맞는지 판단을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과가 있었냐고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성과는 말씀드렸는데요. 콘텐츠를 제작·생성한 게 101건이었고 매출액이 83억 원의 성과를 25년도에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기현 위원 그렇지요.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올해 했던 예산하고 그걸 해서 자를 거는 또 아니지 않는가요, 새로 하는 신규사업도 아닌데?

○김한규 위원 저도 한마디만……

○소위원장 한병도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해외 물류기지 구축 관련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산중위다 보니까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데, 이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LA·뉴욕·시카고·달라스·디스트로이트·실리콘밸리·워싱턴 D.C·애틀란타에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 갖고 소진돼 갖고 신청하는데 다 반영이 안…… 신청하는 기업들이 다 못 쓰고 있습니다, 공동 물류센터를.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동부하고 서부, 보통 CA하고 뉴저지 양쪽으로 보통 배들이 많이 가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특히 화장품의 온도 같은 걸 고려해서 특정한 물류 창고가 필요해서 이런 사업을 신청한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KOTRA 쪽에 추가적으로 신청해도 공간이 없습니다. KOTRA 예산도 안 늘렸기 때문에, 이게 KOTRA 거를 쓴다고 계획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신청하던 업체들도 다 못 쓰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상임위에서 하나 정도 줄이는 걸로 했으니까 하나는 그냥 유지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 2건에 대해서도 일단 위원님들 말씀 취지 참고해서 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밑의 것도 보류입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예. 다 같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9번, 아동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줄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아동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해 지방우대 및 지역화폐 지급에 따른 수당 상향 지급의 전면 철회가 필요하므로 5278억 8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5233억 4600만 원 감액 의견과 일부 감액 의견이 각각 있고, 원안 유지 의견과 6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복지부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아동 인프라가 좀 부족한 점 감안해서 추가 지급하는 것이고요.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현금과 차이가 있는 점 고려해서 일부, 1만 원 정도 더 추가하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 원안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강승규 위원 지역에 아동이 사라지고 있고 청년이 유출돼서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아동수당을 가지고 지역에 차별 지급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 좀 퀘스천을 붙입니다. 우선 아동수당을 이렇게 차별적으로 지급할 경우 아동법에 저촉된다, 그러니까 출생 지역 등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아동복지법의 기본취지에도 어긋나고요.

또 하나는 지역화폐 정책을 또 아동수당 지급 정책에 연계시켜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 부분도 지역화폐 정책과 아동정책 이 부분이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만큼 이 부분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지방을 우대한다, 아동수당이 지방을 우대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도시지역에서도 아동수당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나 더 많은 텐데 지역을 가지고 아동수당을 차별 지급을 하는 것이 이런 복지정책에 적절한지,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아동수당을 13세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한다고 했을 때 이 재원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지금 계속 빚투 재정이 이 아동정책에서도 얼마나 정책 효율성과 또 재정의 어떤 퍼 주기로 여러 가지 지속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계원 위원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아니, 김한규 위원님 하고 조계원 위원님 말씀……

○김한규 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얘기를 감액하시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신 것 같은데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구별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지원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나라들도 지역에 따라서, 지역이나 연령, 출생순위, 소득기준 이런 것에 따라서 아동수당을 다르게 주는 나라들이 여럿 있다라는 게 이미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확인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동수당법에 보면 지자체장이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곳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역화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저는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보면 물론 인구 감소의 문제는 지방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수도권 대비 지방의 경우에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면 부모들이 직접 키워야 되고 경제적으로 더 지원이 필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객관적인 수치로 지방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 1만 5000원 더 주는 거잖아요? 2만 5000원, 아주 특별한 인구감소지역은 2만 5000원, 이 정도의 추가적인 혜택을 준다고 해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불합리한 차별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먼저 조계원 위원님 말씀 듣고 김대식 위원님 말씀 들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께서 거의 대부분의 말씀을 다 해 주셨고요. 제가 봤을 때는 OECD 국가 31개국 중 15세 이하가 7개국 그리고 17세 이하는 20개국, 18세 이하는 2개국, 19세 이하는 1개국입니다,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턱없이 사실은 낮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아까 지역화폐도 일률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고요. 지자체의 자율적인 부분은 충분히 존중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소위원장 한병도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아동수당 주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선택적 복지를 하자 할 때는 안 하고 보편적 복지 하자 할 때는 또 반대를 하고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애들 아동수당은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적 복지 할 때는 많잖아요,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더니 국회의원 우리가 15만 원, 20만 원 받아서 뭐 하겠어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럴 때는 선택적 복지를 좀 하자.

그리고 아동 이런 부분은 보편적 복지를 해야지요, 어디에 차별을 두지 말고. 1만 5000 원, 2만 원 이게 크면 클 수 있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는데 수도권에서 이렇게 좀 안 받는다는…… 수도권에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답변드려도 될까요?

○조계원 위원 지역 우대하지 말고요?

○김대식 위원 예.

○조정훈 위원 저도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한번 이야기 들어 보고……

○조정훈 위원 예.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맞는 말씀이신데요. 기본적으로 아동수당은 보편지급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아동수당의 목적을 보면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지역 내에 인프라가 부족하면 양육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전을,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취지에 비춰 보면 보편적 복지에 크게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한병도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예산 현황, 사업을 보면 8세에서 9세까지 연령 확대가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연령 확대의 경우는 아동수당법 개정이 필요한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법 개정 필요합니다, 위원님.

○조정훈 위원 지금 현재 법안은 계류 중이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금 책정된 9세 예산은 불용이 되는 거지요? 지금 법으로써는 8세까지밖에 못 주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현재 법을……

○조정훈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조정훈 위원 저는 이게 대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관련 법이 통과될 걸 전제로 예산 짜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 원칙에서 법이 이미 확보되고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될 수 있는 모든 법적·제도적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예산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앞으로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될 걸 감안해서 하반기부터 9세 예산까지 포함했다? 이건 확장 예산도 아니고 그냥 무책임 예산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법안이 혹시라도, 국회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통과 못 시키면 이 금액 그대로 불용될 거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9살을 주시겠어요? 이렇게 예산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기재부가 이걸 동의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는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이게 보편이나 선별이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논한 기초연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역 갖고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어르신이면 소득수준으로 했었지요. 그렇지요, 기초연금 지금 대상에 대해서는?

저는 백번 양보해서 아동수당을 늘리려면 인구감소지역 또 특별 지역이 아니라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1만 원, 2만 원, 3만 원 더 주는 것 저는 백번 찬성하고 박수 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지역을 갖고 기준으로 해서 더 우대를 해야 된다는 정책적 근거가, 아까 몇몇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데 수도권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수도권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닌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 너무 굉장히 수도권, 저는 서울에서 정치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김한규 위원** 마포는 가깝잖아요.

○**조정훈 위원** 제가 마포를 얘기한 것 아니에요.

○**김한규 위원** 지방은 얼마나 먼데. 진짜 1시간 걸려요, 1시간.

○**조정훈 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 아까 법적 근거가 없는데 9세 예산을 반영한 것 그 다음에 이 차별 이것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아동수당 지금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3페이지, 10번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예타 면제를 강행하고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이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되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으므로 777억 48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1354억 75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복지부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하역튼 조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원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돌봄통합지원법이 통과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복지계에서 돌봄과 요양·의료의 연계되고 통합적으로 서비스돼야 된다는 그 당위적 과제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요구가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당장 통합 지원한다고 그래서, 특히 여기에 의료 분야가 추가되는데 현실적으로 의료 분야에 대해서 이런 지원서비스가 돌봄 통합에 같이 통합으로 들어오는 데 어떤 실효적 대책이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보면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확충에 528억이 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취약지역이라는 게 저도 지역에 있어 보면…… 예를 들면 면 단위의 돌봄서비스에 의료를, 만약에 취약지역의 서비스에서 의료까지 포함한다. 여기에 의사가 있나요? 복지부에서 어떻게, 의사가 있어요,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지방의 면 단위에 돌봄통합서비스를 의료까지 통합해서 지원한다.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확충비 528억으로 그 사업을 하겠다 할 때 지역에 의사를, 그러니까 돌봄에 의료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는 통합돌봄 의료서비스에 의사를 구할 수 있어요, 지방에서?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강승규 위원 예.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도시와 취약지는 달리 저희들이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구분하고 있고요. 의사가 있는 도심에는 의원들이나 병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취약지의 경우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같이 협업하는 구조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협업한다는 게…… 제가 우리 예산·홍성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산 지역에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11개가 있다면 의사가 3명에서 4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건소에 가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의사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확충한다라고 해 놓고 실제 취약지역에 어떻게 의료서비스가 통합돌봄으로 같이 돼서 한다는 건지……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협업한다? 보건소에 실제 보건소를 내왕하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데 이게 통합돌봄에서 만약에 어디 방문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럴 때 의사가 있냐는 거지요. 예를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다만 그래서 취약지의 경우에는 원래 의원만 참여하게 되어 있던 것들을 병원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의 도움을 받아서 어르신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어떤 사업 계획을?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저희가 재택의료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지와 취약지 아닌 곳의 서비스 모형을 달리 설계해서 지금 저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좀 아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아니에요. 설계한다는 것과 실제 가용 인력, 인적자원도 없고 그냥 말로만 해 놓고 취약지역에 결국은 돈만 뿌리고 취약지역 의료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의사 확충 계획, 은퇴 의사를 어떻게 한다든지 청년 의사를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무슨 공공의료를 어떻게 하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어야…… 예산이 지금 예타도 면제해 가지

고 500억이다 700억이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설계 없는, 그러니까 장밋빛 그림이야 다 있지요. 이것 복지계에서도 수도 없이 요구하던 사항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500억, 700억을 당장 들여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느냐, 예타까지 면제하면서.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사업계획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택의료센터에 관한 부분은 이미 다……

○강승규 위원 제가 그것 실용성 있느냐는 거지요, 그 사업계획이.

○소위원장 한병도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제가 지역구가 제주도다 보니까 이런 의료·요양·돌봄 통합이 문제되고 시범사업을 제주도가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자체에 의사가 없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사를 더 채용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동 지역에 있는 의사들 중에 좀 고령의 의사들 이런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왕진 같은 서비스를 하고 방문할 때마다 수당을 주는 이런 시범사업을 제주도에 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지역별로 다른 방식의 사업을 하겠다 라는 계획으로 지금 이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것은 이분들이 차라리 읍면 지역으로 가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아니면 그 지역에 의원을 개업을 해 주면 좋은데 또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하고 동 지역에 살면서 의료서비스를 하겠다고, 그런데 그쪽은 또 의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서 환자가 적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거면 결국은 왕진을 통해서 찾아가는 재택 의료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하고 그런 방식으로 보건복지부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구체적인 내역들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지금 이 설계가 전국에 동시에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내년 3월에 전국 시행입니다.

○이재관 위원 예산 777억 원으로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지자체마다 229개 중에서 상위 20%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고요, 하위 80%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재관 위원 예산 규모를 보고 저는 시범적으로 하고 확대하는 어떤 그런 전략인가 했는데 전국적으로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있는 자치단체는 국비 지원을 안 받고 자체 시행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그렇습니다. 상위 20%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노인분들을 봤을 때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의료와 요양과 돌봄. 오히려 정부 재정이란지 어떤 행정력의 한계 때문에 그동안 못 해 왔던 부분이지만 노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불필요한, 과도한 요양을 양산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소, 물론 현재 차관님께서 말씀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 방향으로 꼭 나가 줘야 되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여타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에서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전에 설계를 충실히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입소, 입원 경계에 있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계시면서 저희가 불필요한 의료비도 줄일 수 있고 돌봄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조정훈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아까 20%는 제외라는 게 지자체 20%를 제외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상위 20%인데요. 위원님, 덧붙이자면……

○조정훈 위원 그러면 229개 곱하기 20 하면 한 50개 정도는 제외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183개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조정훈 위원 그런 이유는 국고가 없어서?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그러니까 20%…… 재정자주도를 고려한 건데요.

○조정훈 위원 그게 보건복지부의 안입니까, 아니면 기재부하고 협의하다가 이렇게 삭감하신 겁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조정훈 위원 보건복지부는 처음에 전체 다 하기를 제안했습니까, 아니면 20% 빼고 하기를 제안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당초 제안은 다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조정훈 위원 그러면 기재부차관님, 20% 빼신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20%를 제외하자라고 저희가 의견을 낸 이유는……

○조정훈 위원 차관님, 저는 그것은 동의가 안 돼요. 지금 여기 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등등 비롯해서 수십 명 말씀하셨는데……

아니, 자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좋은 사업이고요. 통합돌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데 이것을 지자체 중에 예산 여력이 조금 더 있다고 해서 다 뺀다 그리고 20%는 안 줘도 된다 이런 국가적 정책 기준이라는 것은 없는 완전 자의적인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사업의 비효율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삭감을 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받는 게 맞지……

보건복지부는 동의하시지요, 전국으로 늘리는 것?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증액……

○조정훈 위원 229개 다.

○김한규 위원 증액 의견을 내셨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예산에……

○강승규 위원 아니, 제도를 설계를 잘못했다는 거지.

○조정훈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서울·수도권 위원들 어디 갔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김한규 위원 왜 마포를 빼서 갖고 이렇게……

○강승규 위원 아니, 잘못 설계돼 있다 이거지.

○조정훈 위원 지금 이 자료에 싹 빠져 있어요. 얼마나 이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상위 20%에 걸려 있는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는 28% 정도밖에 안 돼서요.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사실 조정훈 위원님이 많이 하셨는데요. 재정자주도가 높아서 20% 지자체를 빼야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재정 여력에 따라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노인들에 대한 통합돌봄을 해 나가겠다는 정책의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저도 20%를 뺐다라는 게 무슨 기준으로 이걸 뺐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많은 부분이 의혹은, 궁금한 것은 해소가 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의 11번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복지 분야와 그다음 18페이지의 12번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보건 분야, 이 두 개 사업은 아까 농림부와 해수부 사례와 같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조정훈 위원 이런 예산 삭감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돌봄 지원.

○소위원장 한병도 두 건 보류입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복지 분야 AX는 사실은 시설에서 해야 되는 기술들 그다음에 지자체가 해야 되는 기술인데요. 이것은 민간에서 할 수가 없고 공공에서만 해야 되는 공공 AX 성격이 있다는 점 한번 강조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그래서 보류. 다시 논의하는 걸로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9페이지의 13번입니다.

최고급 해외인재 유치(바이오) R&D,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 탑티어(Top-tier) 연구자를 국내에 전략적으로 유치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 없이 예산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으므로 18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복지부는 감액에 대해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최고급 해외인재는 해외 사례라든가 타 부처 사업의 기준을 준용해 볼 때 글로벌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바이오기업의 임원급 인력을 유치 대상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미국 보건부에서 동결하면서 약 1만 명의 해고 통보 등 전문 유휴인력의 급증으로 해외인재를 유치할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미국에서 해고 사태 등이 있기 전이라도 그동안 바이오 분야의 어떤 분야를 우리가 영입을 하면 얼마 정도의 어떤 효과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세워 왔습니까? 그런 리스트도 있어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저희가 글로벌……

○강승규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지금 그건 계속…… 그런 해외인재들 가운데 한국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또 기업의 임원들도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바이오산업에 우리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글로벌하게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분야에 우리 한국인 출신의 석학들이 해외에서 저기하다 그런 부분 등을 적어도 이런 분야에 우리가 바이오에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재를 영입해야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있냐고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주로 글로벌 연구기관이나 바이오기업에서 기술사업화의 경험이 있거나 또 기술이전, 테크놀로지 트랜스퍼(technology transfer) 그리고 미국 FDA의 인허가 획득 지원 경험 등이 있는 분들이 주요하게는 이런 분야의 해외 인재들입니다.

○강승규 위원 그 리스트를 주실 수 있나요, 그게 그냥 계획이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리스크의 감소도 있지만……

○강승규 위원 리스트.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아, 리스트.

○강승규 위원 저희는 이게 해외인재 유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자체를, 예산 때 수립한 그냥 막연한 건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동의를 할게요.

○소위원장 한병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김대식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차관님, 저는 바이오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 석학들을 유치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내에도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돈 18억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거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번 해는 몇 명을 한다, 그러면 어떤 분야다, 이런 것을 국회에다 제출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 게 전무한 상태에서 일단 예산을 따 놓고 후속조치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국내의 바이오 전문가들도 우리가 굉장히 뒷바라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해외에서 온다고 다 그거 합니까?

일본 한번 봐 보실까요? 일본은 해외파를 별로 우대하지 않아요, 국내파를 우대한다고.

그래도 노벨상이 지금 27명이나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해외파도 중요하지만 국내 파를 어떻게 양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면 국회에서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지.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하나도 없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의미에서 삭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위원장 한병도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다른 부처 예산에 준해서 이런 사업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다른 부처에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가 봤던 삼성바이로직스라든지 이런 데를 생각하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이런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되는지, 필요성이 뭔지 한번 부처 의견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처에서는 지금 과기부가 브레인 투 코리아(Brain to Korea) 사업으로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쳐서 1900명 정도의 해외 인재를 유치하려는 그런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고요 또 산업부도 역시 첨단전략기술산업 분야에서 한 70명 정도의 인재를 영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인재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분야, 바이오헬스 분야는 물론이고 지금 다른 해외 인재 유치 경쟁은 사실 중국이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두 번째 해외 인재들의 민간 유치도 사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저희들이 연구책임자급이라든가 이런 경험이 있는 임원들을 하게 되는 것은, 물론 민간 기업들이 잘하는 것들도 있고요. 지금 저희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경쟁력 있는 창업기업이나 중견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유치하고, 이런 노하우라든가 인재에 체화된 그런 지식과 경험들을 잘 활용하는 데에는 브레인 코리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런데 중견기업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대기업도 혜택받을 수 있는 걸로……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중견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중견기업으로 제한돼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소위원장 한병도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연장선인데요 그러면 중견기업에서 해외 석학을 데리고 들어올 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18억 원이라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저희들이 인재를 유치해서 그런 분들이 활동하는 영역에서 중견기업의 어떤 연구라든가 또 기술화라든가 기술이전 이런 쪽의 경험들을, 지식들을 컨설팅해 주고 지원하면서 이 일을 브레인, 인재로서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어와서 중견기업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견기업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활동

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18억 원이라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시게 됩니다. 공무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이 18억 원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이거든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지금 잠깐만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6명에 대해서 3억 단가로는 우수인재 유치에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에 따라서는 유연하게 지원 단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도 지금 현재 우리 부는 2년 반인데요 과기부 사업은 5년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27년도 예산에는 좀 더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들도 함께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번 안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지특회계(지역지원계정) 세출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1번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노쇠예방관리 19억 8900만 원 신규사업은 장기요양 등급외자를 중심으로 정례적 노쇠평가 및 생활현황 파악 등을 통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방문관리사업 등 기존 사업들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므로 19억 89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과 2억 19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복지부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된 사업이고요. 기존의 방문건강 사업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백세교실 다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번 건은 의견을 여야 위원님 한 분씩만 들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26년부터 장기요양보험이나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됐지요? 그렇지 않습니다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강승규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건강보험이 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저희 적자 아님……

○강승규 위원 26년부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장기요양은 아닙니다.

○강승규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적자 안 돌아서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어떤 의미의 적자…… 누적 적립금이 있고 아직 괜찮은데요, 위원님.

○강승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주 여유가 많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강승규 위원 우리가 파악하다 보니까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거라고 그러던데……

그런데 지금 노쇠예방관리 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하겠다는 것이 보건소 10개가 참여하는 시범예산으로 20억 원 규모예요.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이 되면 내년부터는 전국 260개소로 확장되겠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내년에 시범사업 하고 평가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승규 위원 내년에 시범사업이 되면 그다음에는 전국으로 확장되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평가한 이후에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260개 보건소로 확대되면 따져 보니까 올해 20억 원에 10개 사업이면 한 520억 원 되네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올해는 초기 사업비 예산이 들어 있고요. 만약에 전국에 확대돼도 500억은 안 됩니다, 위원님.

○강승규 위원 단순 계산하면 500억 나오던데요.

그런데 노쇠예방사업이 뭐냐 봤더니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을 영양사, 운동처방사, 치위생사 등 방문해서 서비스를 그룹 형태로 제공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지금 이런 유사한 것들이 있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간호사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하는 간호사, 운동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건강백세교실 이렇게 기존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 등에서 기존 사업…… 노인복지관이나 자주 갈 거 아니에요? 지금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또 시범사업을 포함해서 한 500억대 사업을 노쇠예방관리 그러니까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설 프로그램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폐합해서 체계적인 관리 보다도 이렇게 계속 신규사업을 만들어 내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아닙니다, 위원님.

○강승규 위원 그러면 뭐예요? 아니면 뭐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간호사가 가서 노쇠 판단해 주고……

○강승규 위원 간호사가 일대일로 방문간호사업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아닙니다. 여기 사업에서도 영양사, 간호사 같이 간다는 얘기인 거고요. 운동은 건강보험에서 하는 것을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기존 사업의 파편적인 것을 모아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강승규 위원 기존 파편적인 게 뭐, 뭐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업은 여전히 있으니 여기서 갈 때 거기랑 같이 연결해서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강승규 위원 그 연계해서 누가 가는 거예요? 간호사가?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간호사하고 영양사하고 역량이 되면 치과 선생님도 같이 가서 구강 건강을 검진한다는 겁니다.

○강승규 위원 영양사가 처방을 해서……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영양사가 같이 갑니다.

○강승규 위원 어느 경로당에 갔더니 스무 분의 어르신이 있는데 영양실조급으로 건강 상태가 나빠요. 그러면 거기에 급식 같은 것을 지원하나요? 부식비를 지원하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그분의 영양상담은 보건소에서 다른 영양상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치아웃(watchout), 대상자를 발굴하는 취지가 일단 강하고요. 여기에서 발견된 분들 중에 운동이 가능한 분은 건강보험공단의 운동과 연계하는 거고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면 지자체의 다른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판단하고 제공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기존 서비스를 통합한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명분을 삼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영양사를 파견하고 간호사를 파견해서, 지금 방문관리서비스로 간호사가 일대일로 건강과 보건 서비스를 하는 게 있는데 마을 단위로 복지관 단위로 가서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이 방문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운동이 부족한지 영양이 부족한지 이것들을 판단하는 노쇠예방관리 사업을 한다 이게 뭔가 말 하나 만들어 내 가지고 새로 사업 만들어 내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강승규 위원 그렇다고 느껴지니까, 객관적으로.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지금 일대일 방문 건강관리로는 저희가 필요한 128만 노인들을 다 돌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등급에 가기 전에 계신 분들을 모아서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연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보류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라는 거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김한규 위원 보류하려면 그래도 균형이 맞게 질문이 되어야 되니까.

아까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먼저 여쭙어보면 현재는 일대일 개별 가정방문이 있는데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은 소그룹 대상, 그러니까 이미 모여 계신 경로당, 복지회관 이런 데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 그룹별로 이것을 접근하겠다는 이런 방식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리고 기존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그 서비스를 받으셨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등급을 못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이 들어 가시는 것을 관리하는 거고 개별 집으로 가는 걸로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어차피 모여 계시는 김에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됐고.

예타 관련해서, 예타가 500억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강승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보면 2억 곱하기 260개 하면 5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지금 이번

예산을 그대로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시스템 개발비용이 들어가 있으니 나중에 추가하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곱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일정 금액만 260개를 곱해야 된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전 보건소를 대상으로 향후 몇 년 동안 하게 되면 총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500억이 넘는지가 궁금해서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486억 원입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예타 대상이 아닌 거겠네요, 조사 대상이.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소위원장 한병도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장기요양등급 등외자에 대한 돌봄 지원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요양보험법상 급여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저희가 일부 국고보조를 하려고 합니다.

○임미애 위원 일부 국고보조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등외자에 대한 관리를 국가가 하겠다라고 제안하는 사업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임미애 위원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 확인할 필요가 하나 있어요. 아까 1차관님이 2025, 2026 장기 재정전망에 노인요양건강보험 적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적자 아니다 이랬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장기요양보험 말씀하셔서.....

○김대식 위원 장기재정전망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것은 지금 적자라고 확인하는데 임기근 차관님 이것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어떤 것을 말씀.....

○김대식 위원 정부에서 제출한 것은 적자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당기 적자? 수입 대비 지출 말씀.....

○김대식 위원 적자라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저희 적립금이 있어서.....

○김대식 위원 아니,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가.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제가 어떤 자료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장기요양.....

○김대식 위원 기재부 자료에는 26년 당기수지 적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나와요. 4

대 보험 중에서 이게 나온다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저희 며칠 전에……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바가 맞습니다. 당기수지는 매해 연도 보는 것은 26년에 적자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즉 누적으로 쌓인 게 있어서 누적수지 개념으로는 흑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거는 흑자가 유지되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제출한 게 맞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내용을 확인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국민연금기금 수입 증액 사업 1건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기 위해서는 먼저 23페이지를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19번 사업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일부를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건데요. 현재 2010년 이후 매년 100억 원이 정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래세대 부담을 낮추고 국민연금제도와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상임위와 박민규 위원님이 517억 3600만 원 증액 의견을 그리고 이소영 위원님이 일부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시 145페이지로 돌아와서요, 여기서 증액이 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국민연금기금 수입이 상임위에서 517억 3600만 원, 이소영 위원님 의견으로 일부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23페이지에 증액 의견이 있으므로 복지부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복지부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이것은 증액이어서 부처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사업은 지금 수입입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증액을 전제로 지금 수입이 잡혀 있어서 증액하실 때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렇게 하시도록 하지요. 이것 증액 논의할 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기금 지출 감액 사업이 1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수급자 기념품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비록 지출 규모는 크다고 할 수 없으나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1억 79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한규 위원 올해 수익도 엄청 많이 났는데,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이 예산은 수급자들에 기념품 조로 반창고 이런 것 드

리는 건데요. 감액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집행이 부진하고 전액 지방비 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과 유사하므로 5억 31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기타특이사항이 2건 있습니다.

일반회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입니다.

비목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르면 인건비·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관운영 출연금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그런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인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 사업 수행인력의 인건비·경상경비가 계속 사업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예산안편성지침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관운영출연금으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복지부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복지부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복지부는 비목 변경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기재부도 비목 변경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비목 변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76페이지, 기타특이사항 2번입니다.

일반회계,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비목 변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지원 예산 7억 4600만 원에 대해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복지부와 기재부 의견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복지부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비목 변경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기재부도 비목 변경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비목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77페이지 보건복지부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증액사업 1건입니다.

이 내용은 증액사업에 해당합니다만 실제 세출 규모의 증액이 아니고 한도증액이기 때문에 기타특이사항의 일종으로 보아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감액심사 시에 논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마지막 사업입니다.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BTL 사업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026년도 BTL 한도액안에 미반영된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BTL 사업 한도액 903억 3800만 원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것은 민자적격성조사가 완료되면 BTL 한도액을 증액하게 되는데요. 정부예산안 제출 시점까지 민자적격성조사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정부예산안에 포함하지 못했는데요. 지금은 민자적격성을 10월 30일 날짜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BTL 한도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또 BTL 한도 증액이 이 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세 가지 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건은 여기 지금 책자에 명시돼 있지 않으니 증액심사 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이건 증액을 하고 나머지는 증액 때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보건복지부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

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고생하셨습니다.

차관님, 왜 인상 써?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잘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고생 많이 했어요.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식약처 차장 김용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 우영택 기획조정관 우영택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 오세요.

수선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78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증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실제 수납 실적과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31억 48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을 보면 23년에 42억 3000만 원, 24년에 46억 5500만 원, 25년 8월 현재 57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기타경상이전수입 증액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임미애 위원 수용하면 얼마로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저희가 3년의 수납 연평균 증가율이 30.1%입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정부안 대비 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9억 7600만 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김대식 위원 39억?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39억 7600만 원입니다.

○조정훈 위원 이소영 간사님이 아까 얘기해서 통으로 하긴 하겠지만 이게 내용이 지금 지자체하고 민간단체에 보조금 주고 쓰고 남은 잔액하고 반납액으로 구성된 거잖아

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받아야 될 거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그러니까 이게……

○조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수납액이 42억, 46억, 올해 8월은 57억인데 실은 소위 계좌 상에 그러니까 채권으로 돼 있는 게 얼마입니까, 받아야 될 금액 총액이?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일부 저희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산하기관의 수지상…… 해제에 따라서 결산잉여금 반납이랄지 육아휴직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반납 등 특이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수납이 일시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금액은 그 모든 채권을 회수한다는 전제로 계산한 금액이 맞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최근 3년간 했을 때 30.1%가 수납이 증가하는 추세로 봤을 때 예산편성도 30.1%에 맞게끔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도 종합 논의하기로 했잖아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 사업이 2건 있습니다.

먼저 1번,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식품·의료기기 등) 분야입니다.

앞선 부처와 같이 보류하시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80페이지 2번 HACCP제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식약처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내역사업인 스마트 HACCP 확산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의존적 사업으로 볼 수 있고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점, 기존 제도만으로도 식품안전관리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3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아래 칸에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동 사업은 연매출액 5억 미만의 소규모 업체 50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서 스마트 HACCP을 업계에 확산시키는 사업으로서 정부안 유지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이게 그러니까 매출액 5억 원 미만 소규모 식품업체라는 거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사실 HACCP 인증을 받지 않으면 어디에도 납품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액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 소규모 식품업체, 농가공업체 이런 경우에는 HACCP 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

는 사업인데 이것을 감액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다만 이게 HACCP하고 스마트 HACCP하고 똑같은 건 아닌 거고, 그러니까 HACCP은 이미 2만 1000개 업체가 인증 완료해서 잘 운영되고 있고 여기가 놓은 게 다르지만 스마트 HACCP을 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지금 인증업체, 전체 HACCP 인증업체의 약 2%만 스마트 HACCP 인증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지금 그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저희가 HACCP 도입한 지가 95년에 해서 30년 됐고요. 스마트 HACCP은 2000년대에 해 가지고 5년 정도 됐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게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현재는 법적 의무사항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 달에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했을 때 11개 지자체의 82개 업체에서 스마트 HACCP을 하고 싶다고 답변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업체 같은 경우 경북 같은 경우에는 23개, 전남 같은 경우 14개, 대구 같은 경우에는 7개, 경기도는 20개, 충남은 6개 업체가 지원을 받으면 스마트 HACCP을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상태입니다.

○**조정훈 위원** 나중에 보류해서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간사님, 됐나요?

○**이소영 위원** 예.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소위원장 한병도** 식품안전처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 마치겠습니다.

안전처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임승관입니다.

○**질병관리청기획조정관 이상진** 기획조정관 이상진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 오세요.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205페이지 질병관리청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심사 대상 사업이 1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건,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R&D)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 팬데믹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mRNA 백신을 개발하려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28년 백신 개발 완료를 목표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264억 48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병관리청

은 감액안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핵심요소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중심으로 4년간 비임상 과제부터 임상 1·2·3상 과제를 구조적으로 지원하는 그리고 제품화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질병 부담과 백신의 예방 효과를 평가했을 때 국민 건강을 상당히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현재 2025년 예산편성안 기준 백신 구매비로 3504억 원이 외국계 회사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28년까지 제품화에 성공하고 29년도에 생산과 구매가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국산화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이게요, 전번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게 이미 시기를 놓쳤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 유효하다고 봅니까?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팬데믹은 모두가 알다시피 종료가 선언됐지만 현재 풍토병, 엔데믹화되어 있고 65세 이상 고령층 등의 고위험군에게는 매년 예방접종을 WHO와 세계 각국의 많은 보건기구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변이라든지 확산, 수요, 임상 완료 시점을 2028년도로 잡은 거지요. 잡았는데 이것을 고려하면 이건 사업의 정책 효과가 저는 그렇게 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21년·22년도에 우리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또다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반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재정 낭비에 해당된다고 보고. 지금 늦게사 코로나19 백신 개발 사업 여기에다 포함시켜서 이것을 한다? 이것은 저는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 어떤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풍토병화되어서 매년 유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24년, 25년 최근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올해도 여름철 유행이 작년과 비견되게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백신으로 인한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여러 연구에서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게 지금 28년이면 내년이 당장 26년인데 28년까지 이게 나오겠어요? 이게 임상시험용인가 이것은 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은 좀 지속가능해야 되는데 지속가능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래서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지금……

○소위원장 한병도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매년 저희가 코로나 백신으로 수입하는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2025년 예산 기준 지방비 포함해서 350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매년 3000억이 앞으로 계속 투입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지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2028년에 개입, 우리가 개발을 완료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 중의 상당 부분을 국산으로 대체하자. 그러니까 수입을 줄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거지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리고 mRNA 백신이라는 게 결국 매년 우리가 항원이, 바이러스주가 바뀌니까 그것에 맞춰서 그해 그해 적절한 백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거지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그런 항원변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플랫폼 기술입니다.

○김한규 위원 올해 그러면 코로나에 걸려 갖고 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이런 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현재는 표본감시로 전환되어 있어서 전수조사는 결국은 전년도 통계가 나와야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 25년의 여름철 유행은 이런 여러 가지 치료제 수급 등의 문제가 있었던 24년 여름 유행과 규모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리고 현재에도 65세 이상은 백신을 다 접종하게 하고 있는 거지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도 포함 대상입니다.

○김한규 위원 그래서 저는 작년도 예결위 자료를 봤더니 ‘mRNA 백신 개발 성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 편성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년 내에 바로 개발하면 좋지만 2028년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매년 우리가 백신을 투약해야 되는데 이게 단기간에 개발을 못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결국 10년·20년, 계속 1년에 3000억씩 해외에서 백신을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2028년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이 항목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몇 가지 좀……

지금 코로나 백신, 그러니까 RNA 기반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내에서 코로나 기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을 민간 업체든 여러 업체에서 도전을 했는데 백신을 개발해서 성공한, 그래서 상용화 가능한 제품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재조합 백신 같은 경우는 임상 2·3상을 완료하고 해외에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사용한 전례가 있는데 다만……

○강승규 위원 무슨 백신이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스카이코비원 같은 SK……

○강승규 위원 아니, 코로나 관련해서……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개발된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매년 항원성 항원이 변이되는 부분에 대응하기에는 그 기술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이까지 해서 그게 상용화된다면 제품으로 경쟁력 있게 팔리고 있냐 이런 얘기에요. 없지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항원의 변이에 대응하기에는 과거에 플랫폼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제가 좀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 치료제가 개발이 하나가 됐나요, 두 개가 됐나요? 코로나 치료제, 셀트리온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매출이 얼마 나오고 있어요, 치료제 관련해서? 해외나 국내에서 많이 팔려서 실제 저기하고 있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나면 이 백신 개발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강승규 위원 특히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백신 개발에도 민간이나 많은 부분에 투자도 했었고 치료제도 그런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은 아직 없어요. 특히 이번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RNA 기반, 메신저 리보핵산 기반해서, RNA 기반해서 백신 개발한 게 미국에서도 이번에 굉장히 도전적인 거였잖아요. 워낙 급하기 때문에 도전적으로 하고 이것이 지금 성공해서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예방에 조금 더 도움이 됐는데……

이걸 지금에 와서 우리가 아무리 이거 메신저 리보 기반으로, RNA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우리 업체가, 우리가 지금 우리 기술로 뒤늦게 코로나 백신 개발에 뛰어들다는 게 저는 좀 의아했어요, 이제 와서. 아까 얘기했지만 코로나 예산으로 1년에도 3500억씩이나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물음이 가는 것은 우리 기술이, 지금 우리 바이오산업의 기술이 RNA 기반으로 백신을 개발해서, 이렇게 재정 투입을 한다고 그래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냐 이거지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핵심 요소 기술들을 대체로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개발해 왔고 또 복지부나 질병청의 RNA 사업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지금까지 다 실패했다니까요. 지금까지 민간 부문이나 정부 재정을 투입하든 뭐든 다 실패를 해 왔는데 지금 코로나가 뭐 변이도 수도 없이 많고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에 와서 RNA 기반으로 우리가 도전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223억을 증액했어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아직 안 간다는 거지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승규 위원 예.

○소위원장 한병도 아니, 지금 여야 위원님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건 쟁점이 좀 통일되는 것 같아서, 지금 여당 위원님도 세 분 요청이 있었고 이것 요청이 있어서……

○김대식 위원 내가 간단하게 보충 조금만, 한 30초만……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한 분씩 더 들겠습니다.

대표로 노종면 위원님……

○김대식 위원 왜냐하면요, 왜 이런 이야기만 하나 하면 이게 이천이십……

○소위원장 한병도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 하시고 한 분만 더…… 둘 중에 한 분 이야기하셔요.

○박민규 위원 제가……

○소위원장 한병도 예, 박민규 위원님 말씀……

○김대식 위원 ‘2028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건 계속해야지요. 이 연구는 계속 10년, 20년을 목표로 해서 1차 연도에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스타트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해야지 2028년도에 완성…… 어떻게 264억 갖고 임상까지 되겠어요. 이것은 계획 자체가 2028년 백신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해야 되는 거

라.....

○임미애 위원 위원님, 증액으로 할까요?

○김대식 위원 증액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소위원장 한병도 박민규 위원님.

○박민규 위원 우리 팬데믹 생각하면 이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위험이고..... 한마디만 드릴게요. mRNA 백신 개발이 쉽진 않지만 도전해야 되는 이유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성공했을 경우에 부가가치 확장은 매우 큼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과제일수록 국가 R&D를 해야 되는 거고 가장 전문기관인 질병관리청이 잘 관리할 수 있으니 이것은 감액이 아니라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기획조정관 이상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증액이 아니고요 정부 안에 대한 유지를 저희가 요청드린 것이고요.

○박민규 위원 보류하겠다는 게 그 뜻이에요. 괜찮아요.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했다고요. 보류했습니다, 보류.

다 끝났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질병관리청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질병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 분들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차관 이진수입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최지석 기획조정실장 최지석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오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소위자료 3권입니다.

3페이지 법무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감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면허료 및 수수료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 종료를 전제로 세입예산안을 증액 편성했는데 정부가 면제 기간을 26년 말까지 추가 연장함에 따라 수입 감소분을 반영해서 2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는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특별히 말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러면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건, 감·중액사업 8건이 있습니다.

지금 4페이지부터 10페이지에 걸쳐서 총 7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시고 범주를 나눠서 심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범주는 특활비와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모두 2건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영장심의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영장심의위원회 수당 예산은 최초 편성 이후 현재까지 매년 개최실적이 계획 건수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에 맞게 3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입니다.

세 번째 칸입니다. 맨 아래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에 대해 실제 통보건수에 비해 과도한 통보건수를 계상하여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최근 집행추이를 고려하여 335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들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감액안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두 번째 범주는 특활비 감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시 4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 지원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활비 1억 4468만 4000원, 특정업무경비 3억 8309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는 대신 사업추진비 23억 7126만 5000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하 9페이지까지 이와 유사한 내용의 증감액 연계 부분이 있는데 각 사업별로 해당

부분을 다 합치면 당구장 표시 부분과 같이 특수활동비 중 총 20억 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고 특정업무경비 중 총 50억 원을 사업추진비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아래 칸입니다.

검찰이 특활비의 구체적 집행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아 집행의 투명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활비 4억 8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입니다.

증감액 연계로 특활비 6612만 1000원, 특경비 7940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는 대신 사업추진비 45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고, 맨 아래 칸에 앞 페이지와 같은 이유로 특활비 1억 1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형사부 등 수사지원입니다.

증감액 연계로 특활비 7억 4522만 4000원, 특경비 13억 원을 각각 감액하는 대신 사업추진비 23억 8673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고, 추가로 검찰 직접수사 가능 범죄 축소 및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등을 고려하여 특활비 17억 5460만 원 추가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으며,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특활비 45억 6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공수사입니다.

증감액 연계로 특활비 2억 5564만 9000원, 특경비 9212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는 대신 사업추진비 9212만 2000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고, 맨 아래 칸에 특활비 3억 2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민생활침해 범죄수사입니다.

증감액 연계로 특활비 6억 6196만 2000원, 특정업무경비 10억 5971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는 대신 사업추진비 5971만 6000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고, 추가로 상임위에서 특활비 3억 원 추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맨 아래 칸에 특활비 13억 24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사회공정성 저해사범수사입니다.

증감액 연계로 특활비 1억 2636만 원, 특경비 8566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는 대신 사업추진비 8566만 7000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고, 바로 아래 칸에 특활비 1억 58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마약수사입니다.

첫 번째 칸에 특활비 2억 48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 중에 증감액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사항이 있으므로 법무부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먼저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전체적으로 지금 검찰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는데요. 법사위에서 국회에 집행내역 제출 범위를 확대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집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의 논의를 거치셔 가지고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법사위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입니다.

○최형두 위원 이게 합의 처리된 겁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잠시만요, 먼저 기재부 의견 듣고 말씀 듣겠습니다.

다음 기재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내용은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지만 결론은 뭐냐? 특활비 72억 원을 31억 원으로 줄이는 거고요, 특경비 486억 원을 456억 원으로 감액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업추비를 37억에서 87억으로 늘리는 겁니다. 이 안에 대해서 상임위 의사결정이므로 저희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두 번째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특활비가 사백몇억이라고 했지요, 두 번째?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두 번째 특정업무경비가 486억 원에서 456억 원이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특활비는 72억에서 31억, 업추비는 37억에서 87억이 됐다는 거지요, 업추비 마지막에?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최형두 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합의된 겁니까, 아니면 표결된 겁니까? 이의가 있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표결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러니까 이의가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상임위에서 논의될 때 법무부 의견은 어땠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상임위 때요?

○송기현 위원 예.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가 지금 수사활동을 위해서는 특수활동비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런데 마지막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법사위에서 고려해서 가지고 72억 원, 그러니까 약 50억 원가량의 편성안에서 지금과 같은 31.5억으로 감액 의결하시게 되었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때 법무부 의견이 어땠었냐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는 52억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만 3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송기현 위원 수용하겠다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송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여태까지 계속 감액을 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집행내역이 불투명하게 집행이 될 건가요, 특활비가?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저희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과거보다 훨씬 전향적인 자세로 많은 정보를 의원실에 제공해 드렸고요. 지금 앞으로도 대통령실에서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는 기준 등 다른 부처의 기준을 참고해서 가능한 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예산 집행내역에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기현 위원 올해 특활비가 작년 대비해서 얼마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금년 특활비는 4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전혀 집행하지 않았습
니다.

○**송기현 위원** 당초 정부안에서 올해 특활비하고 비교하면 내년 특활비는 얼마가 줄어
들었던 거예요, 정부안은?

○**법무부차관 이진수** 작년에는 80억 배정을 요청드렸었고요 금년에는 72억 배정을 요
청드렸습니다만 법사위에서 52억까지, 저희가 다른 비목으로 전환하겠다고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게 특활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저게 있지만 투명하게 집행되고 공개
된다고 하면 솔직히 부정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필요한 예산이니까 생긴
거라고, 이게.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런 것을 잘 얘기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는 부분을 법무부에서 설득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법사위 최종 의결 직전까지는 그래도 52억
원 수용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만 마지막 회의
과정에서 저희 52억 안에 대해서 31억 5000만 원으로 감액을 하셔서 그와 같이 의결되
었던 것입니다.

○**송기현 위원** 상임위에서 결정이 된 거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필수적인 부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간사님들이 논의할 때
좀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박형수 간사님 말씀 듣고 노종면 위원님 말씀 들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특활비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특수활동비는 증빙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특수활동비를 쓰는
겁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는 기밀을 처리하는 그런 부서의 그런 자금으로 쓰도록 특수활
동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증빙자료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걸 자꾸 문제
를 삼고 깎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번 대통령실 특활비하고 법무부 특활비를, 검찰 특활비를 다 깎
았었지요, 민주당이.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번 추경 때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아무런
얘기도 없이 부활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번 결산할 때 예산 자료를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투명하게 한다고 특활비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는데 보니까 거기 자료가 공개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하나 마나 한 자료예요. 무슨 네트워크비, 무슨 격려비 그것은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과 공개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그 정도의 것을 공개하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특활비
를 인정해 줘야 되고 저번에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활비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의를 한다고 해서 결론 날 부분이 저
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특활비 자체도 그렇고 대통령실 특활비하고 연관
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시고 이걸 보류를 해서 간사 간
에 논의를 하고 다른 것과 연계를 해서 함께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일단 질문을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특활비 깎인 부분이 약 20억 정도고요. 특경비는 어느 정도 깎였지요? 한 30억 정도 되나요? 다 합산했을 때, 아까 차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30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노종면 위원 특경비는 30억 정도, 특활비는 20억 정도, 업추비는 어느 정도 늘었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합쳐서 50억이 늘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50억 증가됐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물론 용도가 다르겠지만 크게 3개의 카테고리가 뭔가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것 총액은 맞춘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노종면 위원 특활비가 특별한 용처에 쓰이는 거라는 데 이견이 여야 간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또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각각 다를 거고요. 도냐 모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기존의 특활비 정보 공개가 미진했다는 건 법원이 공개하라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도 못 미쳤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 비공개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차단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요. 여기에 특활비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규모로 상임위의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줄여 가는 것,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것은 유지하는 것, 이 정도 기조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활동에 필요한 그런 비용은 업추비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 수용하시겠다는데 이걸 굳이 보류로 돌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기회를 주신다면 정확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 기준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20억 5000만 원가량이 감액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20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법무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노종면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것 좀 보류해서, 오늘 상임위 의견안 포함 그 취지를 반영해서 한 번만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추비 관련된 내용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말씀하신 대로 1번부터 7번 사업까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의 세 번째 줄

입니다.

세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최근 3년간 통보 비용의 집행 실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45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2페이지 법무부 마지막 사업입니다.

검찰청 운영 인건비(총액)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인건비 예산이 매년 과다하게 편성되어 이·전용 등을 통해 타 사업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2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 법무부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기재부가 전 부처 공통 기준인 정원 등을 고려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것 불용되는 이유가 차관님이 금방 설명하신 것처럼 애초 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정원을 다 못 채우기 때문에 불용하는 금액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역시 지금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정원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감액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기준 원칙상.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감액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임미애 위원 감액이 아니라 이걸 저희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류하지 말고.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 원안 유지로 할까요?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걸 부처 안대로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법무부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법무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법제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 조원철 법제처장 조원철입니다.

○법제처기획조정관 최영찬 기획조정관 최영찬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오세요.

앉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보고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43페이지 법제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이 2건 있습니다.

먼저 1번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입니다. 현재 법제처에는 파견검사가 근무하지 않고 있으며 법제처는 25년 10월 현재 다시 검사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검사 1인의 직책수행경비 954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법제처장 조원철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의 감액에 대해 법제처는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법제처 마지막 사업입니다.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 육성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법제교육원의 25년 교육생용 셔틀버스 임차료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26년 셔틀버스 운영 예상일수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임차료 4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법제처장 조원철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 육성 사업의 감액에 대해 법제처는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 마치겠습니다.

법제처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 정상우입니다.

○**감사원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종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종운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오세요.

수석전문위원 보고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47페이지 감사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기타잡수입(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입니다.

이 세입과목은 국제형사재판소와 외부감사 위탁계약 체결에 따른 외부감사 업무 수입에 따른 수수료 수입입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외부감사 위탁계약이 26년 신규 체결될 예정이므로 예상 수수료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우리 원은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다른 의견……

○**조정훈 위원** 잠깐……

○**소위원장 한병도**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저는 그냥 궁금해서, 기재부차관님, 만약에 이것을 증액을 안 했고 예상 수수료를 감사원이 다른 나라 감사해 주고 받으면 이 48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냥 들어오는 건데 이왕에 세입예산안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이라도 현실에 부합하게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48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4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건과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감사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예산을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이관하기 위해 2억 4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래 49페이지의 3번 기본경비의 첫 번째 칸에 있습니다. 증감액 연계이므로 감사원과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감사원 의견 들겠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기재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은 2번 감사활동 경비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이 사업에는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국가의 세입세출을 결산하고 행정부 전체 회계를 감시하여야 하나 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활비 15억 19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저희는 저희 예산안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특수활동비는 삭감 시에 사실상 정보 수집 활동이 불가능해져서 국가의 부패 감시라는 기능이 크게 위축됩니다. 참고로 2005년도 예산심사 시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마는 2차 추경에서 6개월분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질문이요.

○소위원장 한병도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2차 추경에서 6개월분이 반영되었으면, 그러면 그 전의 감사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저희가 감사활동이 많이 위축이 났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그 당시 검찰이라든지 같이 일괄 삭감이 되다 보니까……

○임미애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감사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이게 정보활동입니다. 우리 특수활동비가, 약간 기밀성을 요하는 정보활동에 제한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감사원 특수활동비는 수사하실 때하고는 좀 다르게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지적이 있었잖아요. 감사원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반 직원까지 거의 일정한 수당처럼 이게 지급됐단 말이에요, 특활비가. 그래서 항상 지적이 많이 되었지요.

그 체제는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정보활동을 했다고 해서 보고서를 내고 그걸 근거로 해서 특활비를 지급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보활동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신문 보고 하는 것도 있고 옆에서 들은 얘기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걸 꼭 특수활동비로 지급을 해야 되나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저는 사실은 위원님, 제가 한 30년 동안 특활비를 받았는데

요. 특수활동비가 일종의 망 운영비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네트워크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네트워크를 했는데 증빙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 가서 어떤 결과를 안 내놓으면 그 내부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활동을 했다는 증빙으로 뭔가 정보를 내게 하고 직원들은 정보를 내게 해서, 예를 들면 신문에 기사를 냈다고 그러면 그걸 평가를 해 가지고 그런 걸 다 깎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질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까지는 1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액으로 지급했던 관례가 있었습시다마는 2023년 이후에는……

○**송기현 위원** 그건 없어졌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그것도 먼저 지금 신청을 하면 그에 대해서 재무팀에서 받아서 금액을 주고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다른 감사전략팀에서 그 결과를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는 내부 통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기현 위원** 우선 임미애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 6개월 동안에 특활비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와 비교해 가지고 특활비를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1년 치를 하게 되면?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다시 원상 복귀시켜 달라는……

○**송기현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감액을 하고 있잖아요, 특활비를. 그리고 특활비 대신에 특경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감사원도 결국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저희도 이미 많이 줄였고요.

○**송기현 위원** 특활비는 작년하고 똑같은 규모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6개월 추정만큼인데 그 2배로 해서 지금 한 거니까, 올해는.

○**감사원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중운** 기초실장 직무대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감사원은 2020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활비를 감액하면서……

○**송기현 위원** 감액해 왔지요? 그런데 올해는 감액한 게 아니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중운**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감액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원래 당초의 특활비보다 지금 전체가 한……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 하지만 4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준 겁니다, 이 금액이. 그래서 여기서 더 감액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제가 볼 때는 감사원 특수활동비가 사무총장님 설명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사원 직원들의 일종의 어떤 수당처럼 지급되는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례가 저는 꽤 있다고 봐서 지금 같은 규모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위원님, 제가 통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6년부터, 2016년에 37억이었습니다. 37억이었고 그게 계속……

○**송기현 위원** 그 규모나 이런 건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걸 거꾸로 해서 감사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그 형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라는 것은 여전

히 똑같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게 성과나 이런 거와 관계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 활동을 하는 형태를 봤을 때 특활비가 꼭 필요하나 이런 생각도 든다는 말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뭐지요? 마음유지비?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네트워크 관리비.

○**송기현 위원** 네트워크 관리비 그런 건데 그런 거는 매달 이렇게 일정하게 받아 가는 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줄여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실질적인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서 그 부분을 특활비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 외의 비용 같은 경우는 특정업무경비도 가능할 것 같고 업무추진비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규모를 어느 정도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소위원장 한병도** 김기웅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저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저도 옛날에 이런 걸 받아 본 적이 있어서 사실 이거 어디 쓰느냐 묻기 시작하면 엉뚱한 데 쓸 수도 있고요, 아무도 모르니까. 사실은 술을 먹어도 모르는 거고 누구 돈 쥐도 되는 거고 또 아주 중요하게 쓸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걸 여기서 지금 액수 가지고 규모를 갖고 어디 썼냐, 증빙을 어떻게 하는지, 대통령실, 검찰청 다 마찬가지로 아니겠습니까? 국정원도 그렇고 다 이런 건데 그냥 보류하고 같이 좀 따로 얘기를 하하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요.

2023년 이후에 일괄지급 형태는 총장님, 2023년부터 바뀌었다고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1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알겠습니다.

이것도 증액 의견도 있고 감액, 원안 유지 여러 안이 상존하고 있어서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기타특이사항이 1건 있습니다.

감사원의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정비, 비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수정 이유에 총 네 줄이 있는데요. 위의 두 줄은 아까 이미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관이 됐고요. 비목을 관리용역비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과 기재부의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감사원 의견 들겠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의견.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기재부도 비목 변경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비목 변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감사원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들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안녕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조정관 이형석 기획조정관 이형석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51페이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이 2건 있습니다.

먼저 1번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범위 내에서 이미 공통 기능이 구축 중임을 감안할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별도 예산으로 유사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중복 투자로 판단되므로 36억 5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공수처는 감액에 대해서 정부안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의견 좀……

○소위원장 한병도 예,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정부가 당초 9월부터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구축할 때 공수처가 포함되었지요? 그런데 왜 공수처에서 굳이 이것을 분리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저희들이 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라서 시행이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수처가 빠지면 전체적인 여러 가지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공수처가 당초 정부에서는 들어가 있었는데 공수처를 뺐으면 그 전체 시스템을 공수처도 이용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지금 공수처는 빠진 상태로 법무부에서 나머지 기관 가지고 한 것에서 그대로 가면 공수처는 그냥 망만 연결해서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공수처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영장포털 그 부분이 빠져 있고 또 우리 빠지면 다른 부처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부 법무부에서 구축한 그 통합시스템에 공수처도 그 망을 접속해서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ISP라는 게 대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수처 것만 따로 뭐가 36억씩이나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전번 계획에서 예산 제약 때문에 영장포털 부분을 빼고 전산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영장포털은 법무부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법무부에도 그게 필요할 것 아니에요? 만일 공수처 것이 별도로 필요하다면 법무부에서도……

저는 이게 인티그레이티드(integrated)하다는 것은, 그게 공수처든 그게 검찰이든 그게 국가수사본부든 이 전송형 영장전달시스템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시스템은 인티그레이티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망을 접속만 하면 다 이용할 수 있는데 별도로 36억씩을 공수처 것만……

법무부는 당초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로 거기에 예산 한 190억 정도 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공수처가 굳이 빠졌고 다시 36억을 넣겠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IT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하여튼 5개 기관의 총예산이 227억으로 구축되고 그 중에 일부인 지금 우리 예산이 있는 겁니다.

○**강승규 위원** 공수처 부분은 그냥 빠져 가지고, 전체는 220억이었는데 공수처가 빠져 가지고 법무부만 190억 해 가지고 공수처 망이나 이런 네트워크 작업을 못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조정관 이형석** 위원님, 죄송하지만 기획조정관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말씀하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조정관 이형석** 저희들 총사업비가 227억인데요.

○**강승규 위원** 227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조정관 이형석** 예, 법무부를 포함한 나머지 기관이 법무부에 포함되어 있고 공수처는 별도로, 공수처만 이렇게 별도로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된 그런 상황입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그러면 제 질문이 맞아요.

법무부에서 227억에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전송형 영장전달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검찰이든 그게 국가수사처든 공수처든 접속해서 쓰면 되는데 굳이 공수처는 따로 36억을 또 들인다는 거야. 그게 내가 볼 때는 예산 낭비고 공수처가 개별적인 전송형 영장전달시스템을 왜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만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것 따져 봐야 돼요. 이것 전문가들이 보면…… 제 상식으로는 안 맞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조정관 이형석** 위원님, ISP를 할 때 총 227억으로 나왔는데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나머지 기관은 법무부에다 집어넣고 우리 공수처는 공수처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총합계가 227억으로 이렇게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미애 위원** 그게 왜 이렇게 됐냐고……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물어보시잖아요.

○조계원 위원 아까와 다르잖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조정관 이형석 그것은 아마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형사사법시스템은 원래 법무부하고 형통단을 만들었었고 공수처는 21년도에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도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따라가다가.

○강승규 위원 아니, 25년 9월부터 공수처가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구축하고 있잖아요. 이것에서도…… 공수처가 그동안 사법시스템이 좀 달랐다 하더라도 이 전송형 영장시스템은 좀 통합적으로 쓸 수 없는 거냐는 거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조정관 이형석 전자영장시스템은 지금 구축 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구축한다는 얘기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고도화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입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이 전송형 영장전달시스템 아니에요? 정보화체계 구축사업이 전송형 영장시스템 아니에요? 시스템 구축한다고 설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조정관 이형석 예, 그것은 26년도 사업입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아니, 지금 51페이지 보면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비로 36억 5500만 원 반영을 요청했잖아요,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고도화사업의 내역이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 맞지 않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조정관 이형석 아닙니다. 고도화사업은 그게 아니고……

○강승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우리 이것은 잘못 본 건가요?

○조계원 위원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위원장 한병도 잠깐만요.

○조계원 위원 신규 사업이고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돼 있는데……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조정관 이형석 고도화사업하고 전자영장 시스템은 조금 다른 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지.

○이소영 위원 이것은 예결위 수석님께서 좀 확인을 해 주시지요.

○강승규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과 답변하시는 것이 달라요. 그냥 별도로 구축돼 있는 것을 이쪽 공수처는 고도화사업 하는 거다, 36억을 가지고. 저희는 법무부에서 전송형 전자영장 시스템 통합 구축을 25년 9월부터 하고 있는데 또 고도화사업 내역이, 그것을 공수처에서 따로 하려는 거다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수석이나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한번 확인해서,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지요.

○조정훈 위원 보류하시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지금 227억의 총사업비 아닙니까, 법무부에서. 지금 행안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의 정부……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원스톱서비스로 가야 되는데 법무

부에서 이것을 해서 집행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36억 5000만 원 이것을 별도로 빼낸다는 이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법무부 따로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하고 전체 호환이 안 됩니까? 경찰하고 호환 안 됩니까? 전체 호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조정관 이형석** 지금 사업비는 공수처는 별도로 편성했지만 사업을 나중에 구축할 때는 법무부에다 이관해 가지고 같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설명을 좀…… 설명이 잘못됐어요, 이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조정관 이형석** 그러니까 이 이유가 저희들 아까 전에 고도화하고 지금 전자영장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 다른 상황이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법무부하고는 형사사법절차 전자문서화법에 의해서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전자문서로 다 전환이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도화를 하는 거고요. 전자문서에 대해서 지금 고도화를 하는 거고, 전자영장은 내년부터 모든 6개 형사사법기관이 같이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소영 위원** 아니, 실장님……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른 거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그걸 같은 것으로 얘기해서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수석이 확인해서…… 나중에 이것은 제가 확인하고 처리할게요.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 보류하고요. 지금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공수처 마지막 사업입니다.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입니다.

내역사업으로 비실명 내부고발 신고시스템 이용 수수료 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민감한 내부 정보를 다루는 기관 특성을 고려할 때 외부 위탁 방식의 사업 추진은 부적절하므로 외부 위탁 수수료 13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희들 공수처는 감액에 대해서 정부안 원안 유지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이것도 제가 좀……

그러니까 비실명 내부고발 신고시스템이 공수처에 구축이 안 돼 있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지금 새로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승규 위원** 새로 이런 제도를 도입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강승규 위원 그런데 도입을 하는데 비실명 내부고발 신고시스템을 외주를 한다, 용역을 한다 그러면 그게 민간이 할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이…… 어찌 됐든 고발자나 이런 부분 등이 굉장히 보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외부 위탁기관에 맡기면 이게 비밀이 유지가 될까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처음에 독립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을 먼저 원안으로 생각했었는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고, 그러면서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비용 절감하에서 할 수 있는 안을 찾은 것이 이 시스템입니다.

○강승규 위원 또 이것도 제 상식하고는 조금 다른데 지금 공수처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것 고발 신고시스템 만드는 것 그것 별것 아니거든요. 그것 별것 아닌데 그게 막 엄청난 수십억, 수억 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그것 코너 하나 만들면 되는데 그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까 그런 시스템 고도화사업도 하신다면서 이것을 이렇게 외주화한다는 것이고 외주는 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이거야말로 정말 비밀보호가 돼야 되는데, 아주 철저하게 공무원 사회에서 관리자만이 딱 그것을 엄격히 관리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외부 용역 할 때, 저는 이것은 또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 여하튼 비밀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설계하고 또 그런 부분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미애 위원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임미애 위원 이게 공수처의 이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이렇게 내부고발과 관련된 신고시스템이 있을 텐데 다른 부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경찰청·국방부는 케이휘슬이라는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연금공단 같은 데는 레드휘슬이라는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한다는 방식이 특이하거나 특별한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그러니까 독자 구축을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 외부 기관에다가 이것을 위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이게.

○강승규 위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감사합니다. 이것은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 마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고들 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사무차장 김용호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김용호입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기획조정실장 하정수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하정수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심사할 게 없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렇게 인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사무차장 김용호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대법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입니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기획조정실장 이형근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들 오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57페이지 대법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감액사업이 2건 있습니다.

먼저 1번 가족등록업무 전산화입니다.

내역사업에 기타운영비가 있습니다. 가족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임차료입니다.

이에 대해 26년 전산장비 임차료 예산액이 실제 집행 예정인 금액보다 과다 편성되어 있으므로 2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들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58페이지 전문재판 운영입니다.

대법원 마지막 사업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내역사업인 회생법원 운영 및 역량 강화는 회생법원 이전 및 설치, (구)서울회생법원 공간 재배치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026년 회생법원이 캠프양재타워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회생법원

이 사용했던 제3별관, 제4별관만 공간 재배치를 실시할 예정인데 26년 예산에 본관 공간 재배치를 위한 자산취득비가 계상돼 있으므로 본관 사무실 자산취득비 3억 2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는 법원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이므로 이를 통합하기 위해, 다음 59페이지 보시면 법원시설관리 등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부사업으로 방금 감액한 3억 2300만 원을 제외한 증액분 208억 7300만 원을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역시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증감액 연계사업이므로 대법원과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대법원 말씀 들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 안건에 대해서 우리 기관은 감액에 관해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3억 2300만 원의 순감과 208억 원의 비목 이관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대법원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 마치겠습니다.

대법원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국무조정실하고 국무총리비서실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장영현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69페이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4건, 감·증액사업 4건 있습니다.

1번 대테러센터 운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가 대테러 발전 세미나의 관련 결과보고서 내용이 불분명하고 예산집행이 불투명하므로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상임위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이어서 2번 국정현안대응 및 정책 조정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두 번째 줄입니다. 다른 세부사업인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시민사회 소통 및 국정현안 의견수렴과 목적 및 활동내용이 중복되므로 1억 3900만 원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정부 원안인 1억 3900만 원을,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예산 성격이 좀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쪽의 시민사회 소통……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이건 전혀 다릅니다.

○강승규 위원 다른 거예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이 건은 총리님이 장관들하고 현장에 가서 수요자의 의견을 같이 들으면서 현장에서 회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책 결정이 바로 이루어지는 회의입니다.

○강승규 위원 회의 예산이라고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강승규 위원 그러면 국회나 정당이나 시민사회하고 소통하는 예산은 그건 장관……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그건 별개고요. 이것은 총리님이 장관……

○강승규 위원 현장……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국정현안조정회의라고 그 회의가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있었어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계속 있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낮았어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작년, 올해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조금 실적이 부족했는데 저희가 올해 벌써 현장회의를 한 번 했고요. 경남 밀양에서……

○강승규 위원 평소에 몇 번 정도 하는데요? 예년에, 작년에 몇 번 했어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작년에 현장회의는……

○강승규 위원 장관회의를……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장관회의요? 장관회의……

○김한규 위원 여기 19건이라고……

○강승규 위원 19건?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거의 한 달에 두 번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박민규 위원님.

○박민규 위원 이거는 원안 유지하시는 겁니까? 철회하시는 겁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 조정은 원안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70페이지 3번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의 일반수용비 중 의견수렴 사례금, 성과보고회 자료제작 등은 24년 실집행 실적에 5%대에 불과하고 예산편성 시에 없었던 일반용역비를 전용 및 세목 조정하는 등 국회의 심의·확정 결과와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었으므로 9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는 정부 원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다만 여기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가 대통령 모시고 성과보고회를 개최를 하는데 이게 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수용비로 해 났다가 용역비로 전환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는 원안은 유지하되 3000만 원을 일반용역비로 비목 조정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조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액은 그대로 주고 3000만 원은 일반용역비로 가서 쓸지 모를지, 모를 정도로 더 유연하게 해 달라는 게 요청이지않아요. 아무리 시간이 늦어도 그건 아니지요. 지금 예산을 정확하게 쓸 계획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 예산만 지금 예산을 짜는 거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언제 있을지 모르니 그 불확실성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항목보다 더 유연한 일반용역비로 전용해 달라는 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 한 것을 행사 생기면 용역비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자꾸 지적을 하셔서 이번에는 아예 용역비로 이렇게 떼서 주시면 그 안에서 저희가 성실하게 집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조정훈 위원 전액을 일반용역비로 세목 조정해 달라?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3000만 원.

○조정훈 위원 그러세요.

○소위원장 한병도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쭙보는데 국정과제 관리를 대통령실에서 하나요, 총리실에서 하나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실무적인 관리는 저희가 국정과제관리관실이 따로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국정과제비서관이 있잖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비서관이 있고 저희는 국정과제관리관이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 번 할 때, 대통령실에서 전체 해서 모시고 평가하는 사업 그 행사는 대통령실에서 주관하지 총리실에서 주관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대통령실에서 주관하지만 실제로 예산은 소관 부처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김기웅 위원 소관 부처에, 각 부처가 오는데 나는 이상한 게 이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국정과제는 총리실이 소관 부처입니다.

○김기웅 위원 그래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김기웅 위원 나는 대통령실이 행사 할 것 같은데, 따로?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아니, 대통령님 모시고 행사를 한다고 대통령실이 다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김기웅 위원 아니, 실제로 그런 행사가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잖아요. 많은 걸 다 거기서 한다고? 아닐 텐데.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아니,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저희가 담당을 합니다.

○김기웅 위원 그래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김기웅 위원 아니, 그래서 내 얘기는 여기저기서 하는데 총리실만 넣어 놓는 게 이상하다 이거지요. 그리고 총리실이 별로 하는 게 없는데. 실제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가 국정과제 점검하고 평가하고 연말 평가에 다 평가 반영해서 부처에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저도 다 해 봤는데 총리실 내는 거 없는데.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정부업무평가법이라고 법이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래요? 나는 하는 것 없는 것 같은데……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정부 원안 유지하고 용역비 비목 조정해서 3000만 원 하는 것에 대한 다른 이견이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런데……

○소위원장 한병도 예,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이게 좀 과다 편성됐다는 그런 지적은 안 받으시나요? 항상 예산이 좀 남고 그러지 않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가 밑의 사례금은 조금 남아서, 아직 말씀은 안 드렸는데 밑 부분 국정과제 성과보고회는 원안대로 해서 비목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35%, 47%, 그러니까 50% 미만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그 밑의 사례금은 아직 지금 ……

○조정훈 위원 박민규 위원님이 깎자고 했으니까 깎아야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3000만 원을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 비목 전환하는데 대해서 기재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원안 유지하고 3000만 원 용역비 비목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4번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사례금이 실제 소요 대비 과다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6년도 예산안이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000만 원 감액 의견과 일부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만 3000만 원은 좀 과도하고 1000만 원 감액으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제가 감액 썼지만 1000만 원 감액을 요청합니다.

○강승규 위원 2000만 원 감액 동의합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1000만 원 감액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방금 정부에서 2000만 원 감액이라고 했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아니요, 1000만 원 감액……

○강승규 위원 아니야, 정부가 지금 2000만 원이라고 했어.

○조정훈 위원 정부는 2000, 박 위원님은 1000.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1000만 원 감액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1000만 원 발음이 약간 부정확했어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1000만 원으로 감액……

○이소영 위원 아니아니, 명확하게 어떻게……

○강승규 위원 1000만 원 감액한대요.

○소위원장 한병도 10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000만 원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숙의공론화기구 운영,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구체적 사업계획이 미비하고 공론화기구의 활동 여부 및 범위 등이 사후적으로 결정되어 적정 예산 규모의 판단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8억 3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과 36억 3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는 원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총리 훈령을 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김문수 의원 의원입법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 차질 없이 숙의공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이건 상임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고 숙의공론화라는 이름의 아주 막연한 주제로 이렇게 예산을 거대하게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한말씀……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이번 새 정부의 모토가 국민주권정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모토이자 정책의 방향이고 여러 정책에 있어서 숙의공론화 방식을 포함해서 다양한 국민 소통을 늘려 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 자체는 아마 여야를 불문하고 공감대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총리실에서는 새로 훈령을 제정해서, 만들어서 숙의공론화를 구체적으로 활성화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을 밝히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감액 의견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조금 더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수 간사님.

○김대식 위원 이게요.

○소위원장 한병도 잠깐만요.

박형수 간사님 하고 그다음에 김대식 위원님.

○박형수 위원 저도 보류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총리실에 당부를 좀 합니다.

숙의공론화 기구라는 것이 필요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을 충분히 듣고 그것을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어떤 걸 가지고 숙의공론화할지를 여기서 논의하겠다고 그러면 숙의공론화 의제를 만들어 내는 게 됩니다. 그거는 숙의공론화의 정상적인 방향이 아니거든요.

만약 훈령을 그런 식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총리실에서 또는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의제를 어떻게 설정하겠습니까? 반대 의견 나올 거를 의제 설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들러리 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숙의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훈령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박형수 간사님께서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 왜 이렇게, 늘 이야기하지만 어려운 말을 이렇게 써요? 이거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숙의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국민들한테 숙의라고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아는지.

아니, 이거를 조금 쉽게 좀 풀어 가지고, 새 정부에서 국민주권정부라고 해 가지고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 해야 되는데 숙의공론화기구 이렇게 하면 애매모호하잖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유의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용어 변경 등을 검토를 하고요.

○**김대식 위원** 용어 변경 좀 하세요, 이거.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사실 과거에 저희가 신고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한두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때 한 번 하는 데 한 25억 내외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8억 감액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상임위 감액도 상당히 저희가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정부 원안을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기웅 위원** 질의 하나만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김기웅 위원** 기재부차관님, 법정기구 아닌 이런 기구들, 임의기구들 법도 아니고 훈령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 한때 안 된다고 해서 정리하고 없애자는 게 정부 기조 아닌가요? 저런 기구 하나 만들겠다고 이렇게 근거도 없는 거를 만들고 예산 신청하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 필요하지 않은 기구는 정리해야 되겠지만 또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 기구는 만들어야지요. 그걸 무조건 안 만든다든지 그런 아니지요.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만들든지 그냥 지시처럼 해 가지고 여기저기 만들고…… 원래 반대하고 없애는 일을 계속 해 오지 않았나요, 기본적으로?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지금 의원입법으로 나가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래서 되면 모르겠는데, 내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처도 해요. 이걸 보니까 전부 다 무슨 사회적 대화라고 그래 가지고 기구 만들어서 지금 다 이거 아까 말한 대로 펼쳐 나가는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나. 정리가 돼야 되지 전부 하나씩 하겠다고 들고 나오면 전부 돈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회적 대화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정부조직법 20조에 의해서 저희가 국무조정실에서 공공갈등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게 국무조정실에 있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그래서 이거는 그 사업 중의 하나라고……

○**김기웅 위원** 제가 본인이 아니고 기재부에 여쭙보는데 옛날에 그러다가 없어진 조직이 워낙 많잖아요. 한두 개 없어진 게 아닌데, 누군가는 이거 정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냥 전부 다 하겠다 하면 다 돈 주고 그냥 만들라고 그러나.

○**소위원장 한병도** 숙의공론화기구 운영 관련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72페이지 6번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특수사업비 중 연구기관 지원 강화의 인쇄 및 제작단가를 인상하였는데 그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25년도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없지요」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2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73페이지 7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후시민회의를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대국민 의견수렴 예산을 17억 원 증액했는데 기존 사업과 거의 동일한 내용임에도 예산액이 18배 증가된 것은 이례적이고 증액 규모에 비해 항목의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15억 1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과 9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는 증액 의견에는 각각 동의합니다. 그리고 15억 원 감액보다는 원안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원안 유지.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기후시민회의를 운영하는데 기존 예산에서 이렇게 대폭 늘리는 이유가 뭐지요? 어떤 회의를 하려는 거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가 2035 NDC가 올해 발표가 되었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매년 자동차는 언제쯤 없애야 되는지 그런 후속과제들이 계층별로 또는 산업별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을 저희가 기후시민회의라는 체제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정책 결정을 좀 도와가는 그런 과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지금 NDC를 대폭 상향한 것 등에 대해서 산업계나 이런 데서 굉장히 우려도 많고 그것을…… 그런데 또 이렇게 기후시민회의를 통해서 엄청난 시민사회의 압력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면 결국 이런 것이 어떤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등에서 뭔가 사회적 압력을 넣고 결국 기업들은 또 실제 활동에 많은 제약들을 거는 여러 가지 시민사회 요구 등을 분출시키는 그런 장이 될 텐데 총리실에서 아무리 탄소위에서 이런 회의를, 이렇게 1억 원짜리를 18억 원이나 증액시켜 가지고 대규모 회의

를 위해서 어떤, 저는 이것도 시민사회에게 뭔가, 이들에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기후시민회의에는 한 500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강승규 위원 아니, 그 500명이 다 하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지금 지적하신 말씀처럼 산업계의 의견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번 NDC를 정할 때도 산업계의 의견과 또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어우르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쪽 사이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기구가 필요하고 이 논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저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무슨 균형을 갖추려는 게 아니라 한쪽에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 주고 손을 들어 주고 산업계를 압박하기 위한 회의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그렇게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제가 증액 의견도 낸 입장이기 때문에 감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게 2035년 NDC의 정부안은 최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결정이 됐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에 31년부터 49년까지의 경로를 이제 결정해야 돼요. 내년에 결정해서 법제화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의사결정 과정이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온실가스 감축 경로라고 하는 게 어떠한 경로를 따라가느냐, 1안으로 가느냐, 2안, 3안, 4안,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또 산업계의 실제 삶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데 이게 기술적이고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정작 여기에서 큰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이 안이 각각 얼마나 어떤 영향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전문 관료, 기술자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결정을 담아서 국회가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중의 하나인데요.

저는 이런 기후시민회의 운영을 통해서 국민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조금 더 공론화해서 논의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런 것은 전체 온실가스 감축의 큰 그림에 비교하면 아주 부분적인 조각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정하게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 그때 굉장히 긴 기간, 많은 비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저도 예전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라는 기구가 설립이 되고 반기문 위원장 중심으로 공론화를 했을 때,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했을 때 실제 민간위원으로 참여해 본 적이 있지만 어떤 특정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와서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 중에 랜덤하게 50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500명이 아주 충분한 정보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만들게 하고 결국에 그분들이 결정하게 되는

결과물은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감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한 분만 더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 기후시민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500명 정도 규모로 하겠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회의를 한 번 정도로 기획을 하고 계신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한 번 500명이 모여서 숙의 과정을 거치는 데 대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 번 만나는 게 아니고 모여서 학습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학습하면서 그 의견이 어떤 취지로 변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임미애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거제도 바꾸자라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주민숙의단을 구성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TV 토론을 통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국민들한테 보여 줬었고 그래서 국민들도 처음의 생각과 나중의 생각이 조금 바뀐 것들을 저희가 확인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려면, 제가 보니까 이게 들어와 있는 예산으로는, 시민회의를 운영하는 비용으로는 한 번 모임에 1억 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맞나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그러니까 저희도 최소한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것 가지고는 매우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원안 유지, 증액, 감액 결론을 내기 힘들어서 이것도 보류하고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74페이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마지막 사업입니다.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K-토론나라 운영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정권 홍보 목적이 두드러지고 행안부 국민신문고 등과 기능적으로 중복되므로 관련 예산 6억 31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는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K-토론나라는 지금 지적하신 정권 홍보나 국민신문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올해 벌써 네 번을 했습니다. 총리하고 청년이라든지 여러 단체나 계층을 만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심층 토론하는 그런 소통 구조입니다.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아까 탄녹위에서 기후회의를 회의비를 대거 늘려서 한다는 것, 토론나라 등을 통해서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 정부 정책이든 어떤 기구든 어떤 프로젝트든 소통을 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빚을 내서 재정을 운용하면서 꼭 불요불급한 예산, 필요한 예산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의, 국가의 여러 가지 핵심 부분 등을 강화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저는 NDC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기후 위기도 있지만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통상 문제, 어떤 패러다임 전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할 때 업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등을 정부가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산업을 압박하고 그것을 또 뭔가 회의를 통해서, 시민사회의 어떤 영역을 통해 가지고 공론화라는 명목으로 저기 하는 것, 이것도 지금 토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부 정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포장, 어떤 홍보 이런 것 등을 강화하는 것이 결국 이재명 정부에서 제대로 편성해서 내년 예산을 할 때 빚을 141조나 증액해서 만든, 국민의,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수립해서 할 때 이런 것을 하나에 막 18배를 이렇게 토론하는 데 몇억씩 그냥 운영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토론하면 더 좋다 그러지요. 저희들도 홍보비 막 해 가지고 국회 의정보고서 1년에 한 10억씩 쓰면 좋지요. 그것 누가……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을 말아야, 토론을 통해서 의정보고회를 매년 달마다 주민들한테 다 보고한다고 하면 그게 왜 의정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하거나 낭비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걱정하지 않고 자꾸 과해 보여요, 이런 부분이. 그렇게 지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박민규 위원님.

○박민규 위원 원래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6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요구를 하신 국민의힘 위원님 말씀도 동의가 되는 면은 있지만 본 사업은 기본적으로 전임 대통령과 전임 정부의 국무총리와 현 이재명 정부와 현 국무총리의 국정을 대하는 스타일에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대사회가 복잡다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소통과 홍보는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어서 감액보다는 원안 유지가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

○조계원 위원 저도……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두 분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조정훈 위원님 하십시오.

○조계원 위원 저는 간단히요.

이게 정부 정책을 홍보하자고 하는 게 아니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정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거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의견 수렴……

○조정훈 위원 다 하셨습니까?

정책을,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건데요. 그것은 토론의 주제이긴 하겠지

만……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도 몇 번 하셨다고 하셨지요, 총리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네 번 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한 회당 한 400만 원 썼는데 지금 보내 주신 예산에 의하면 내년에는 회당 한 2400만 원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조금 중요한 건데 국무조정실이 시민들과의 정책 조정 기능을 해야 될 권한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정부조직법상 국무조정실의 정책 조정 기능은 부처 간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무슨 권한으로 여러분이 시민들과 직접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이 회의체는 정책 결정을 위한 회의체가 아니고요. 정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 구조입니다. 이 토론나라에서 결정이 되는 건……

○조정훈 위원 국무조정실에 고유한 정책 조정 기능 또는 정책 수립 기능이 없다고요, 정부조직법상.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정책을 조정하고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정훈 위원 그렇지요. 부처 간에 한정하는 거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부처만의 의견이 아니고 국민들의 뜻을……

○조정훈 위원 지금 이게 부처 공무원과 하자는 게 아니고 시민들과……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조정훈 위원 지금 국민들과 사회적 대화 플랫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걸 법적 근거도 없고 매우 부적절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한병도 의견들이 많으셔서 뉴미디어정책정보서비스 관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책자 문제 때문에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보훈처랑 그것은 감액이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책자 관련된 이것 때문이에요.

○조정훈 위원 여기 다 있는데요.

○소위원장 한병도 아니, 이것 말고 이후에 위원님들도 보셔야 될 게 있어서……

○박형수 위원 4권이 나왔는데 5권이 안 나왔어. 내일 5권까지 해야 되는데 5권이 안 나와서, 5권이 오늘 밤 10시 돼야 나온대요. 그래서 그걸 위원님들이 좀 보시게, 그러려면 11시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개인정보위원회 등등은 끝난 것 아닌가요?

(「아직 안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개인정보위원회 제가 슬쩍 보니까 감액 딱 하나 있고요. 그 앞에 있는 기관…… 그 뒤에 또 있다는 거예요?

○박형수 위원 개인정보위원회가 많다던데, 국가보훈부가 많다 그랬나……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강승규 김기웅 김대식 김한규 노종면 박민규 박형수 송기현 이소영 이재관
임미애 조계원 조정훈 최형두 한병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전문위원 정대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감사원

사무총장 정상우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종운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김영수

총무기획관 이상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임기근

예산실장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

법무부

차관 이진수

기획조정실장 최지석

국가보훈부

차관 강윤진

기획조정실장 오경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박순연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스란

제2차관 이형훈

기획조정실장 임호근
보건산업정책국장 정은영
해양수산부
차관 김성범
기획조정실장 김재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기획조정관 이형석
법제처
처장 조원철
기획조정관 최영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김용재
기획조정관 우영택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
기획조정관 이상호
산림청
청장 김인호
기획조정관 이종수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기획조정관 이상진
해양경찰청
청장 김용진
기획조정관직무대리 김시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기획조정관 선중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기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
기획조정관 김기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이정렬
기획조정관 고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장영현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

기획조정실장 이형근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차장 김용호

기획조정실장 하정수